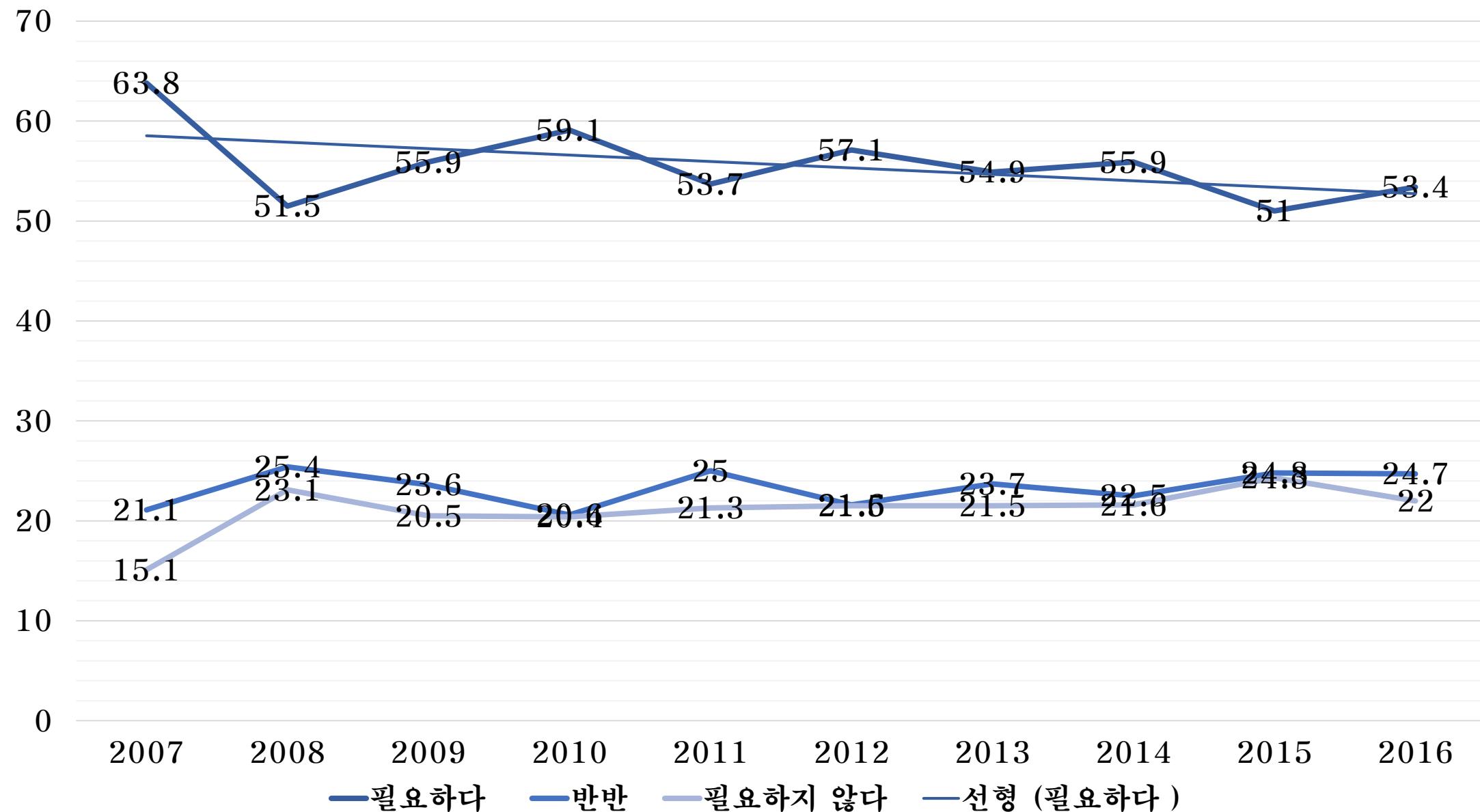


2018. 4. 10. 통일아카데미

독일 분단과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김학재(통일평화연구원)

〈그림 1〉 통일의식의 시기별 변화 (2007~2016)



〈그림 2〉 세대별 통일의식의 차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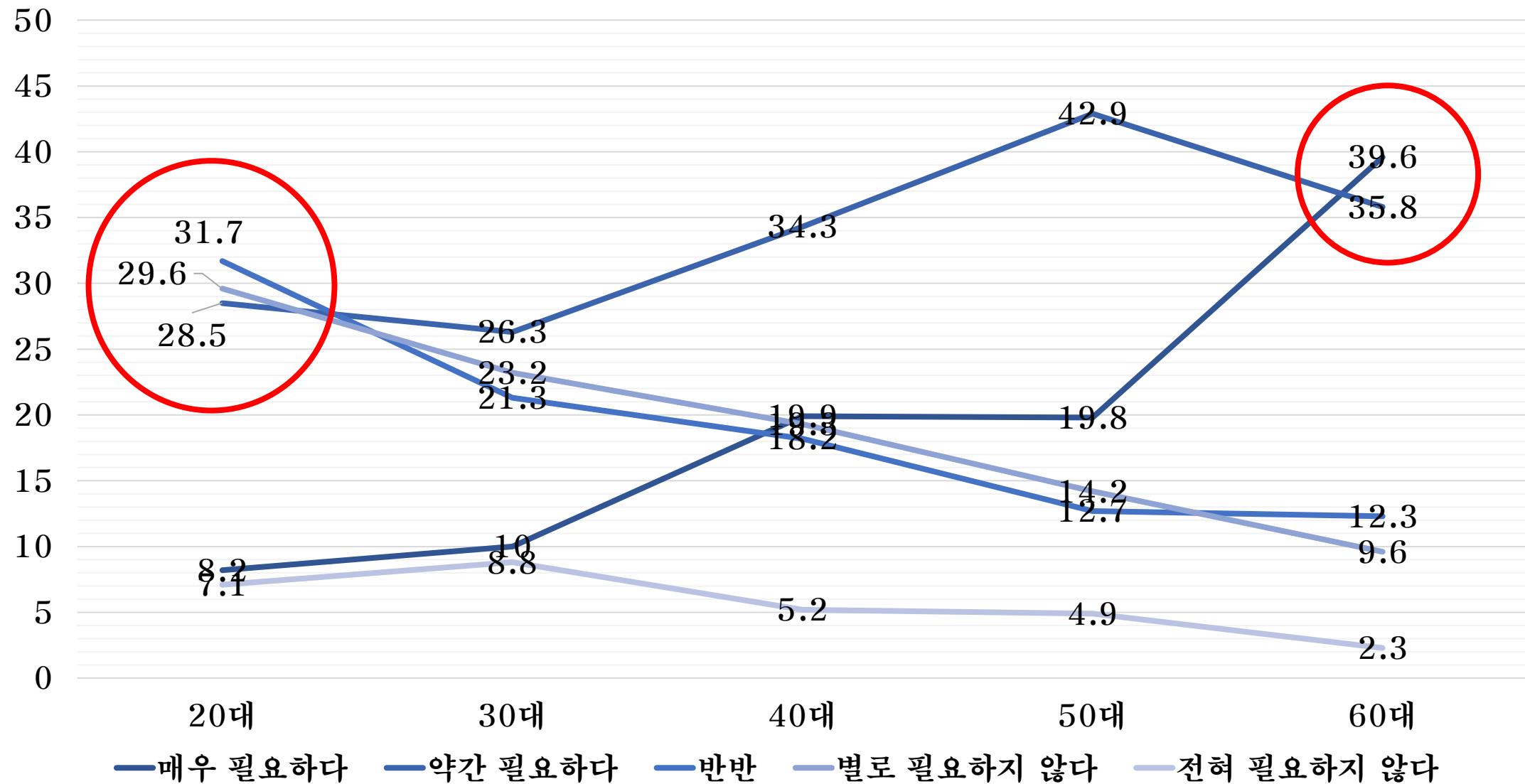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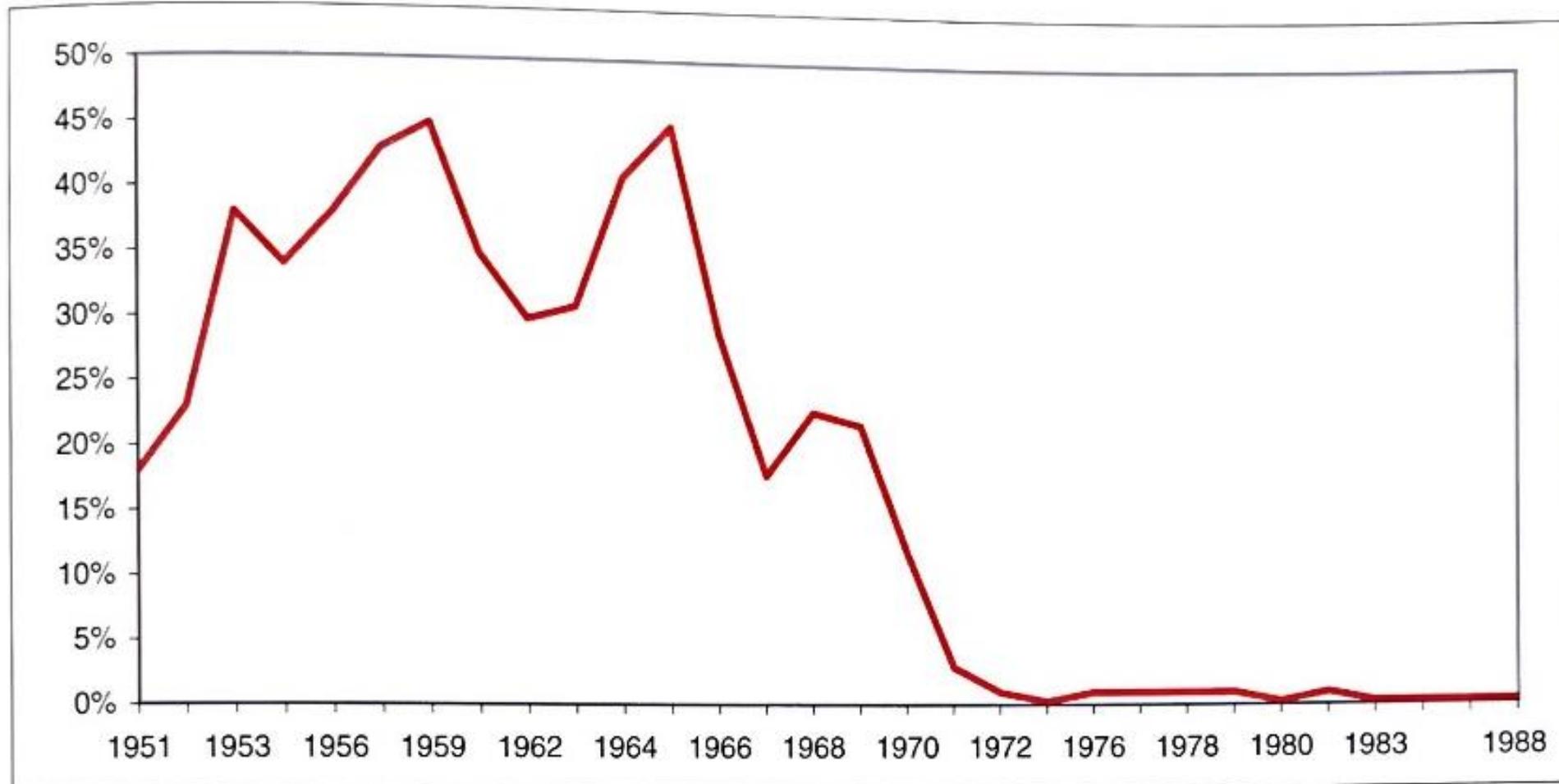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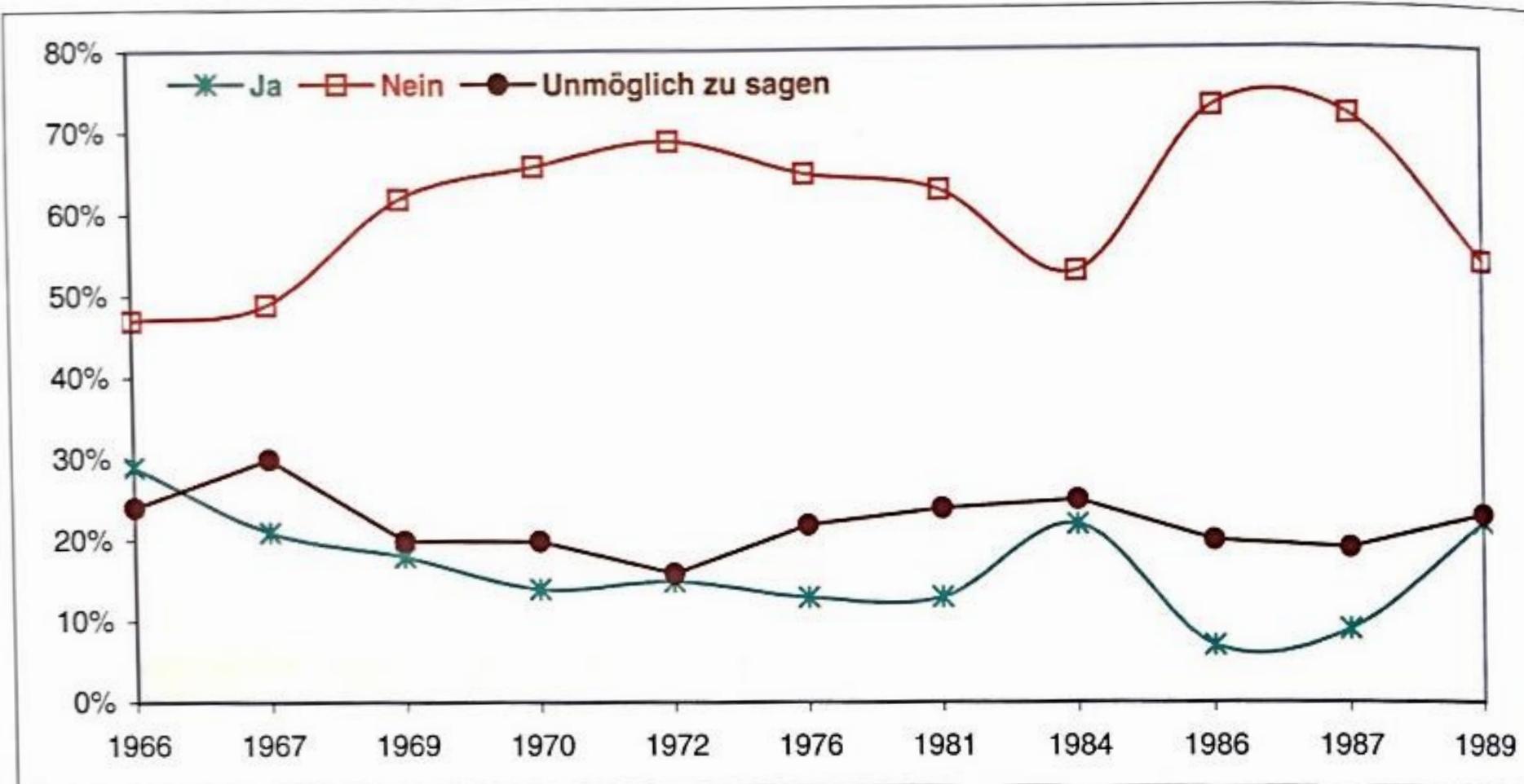
Abb. 4: Wiedervereinigung – wichtigste Frage in der BRD



Antwort „Wiedervereinigung“ auf die Frage: „Was halten Sie für die wichtigste Frage, mit der man sich in der Bundesrepublik heute allgemein beschäftigen sollte?“ Bundesrepublik mit West-Berlin; Bevölkerung ab 16 Jahre.

Quelle: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Abb. 5: Wiedervereinigung möglich?



Frage bis 1969: „Glauben Sie, dass Sie es noch erleben, dass sich Ost- und Westdeutschland wiedervereinigen?“, ab 1970: „Glauben Sie, dass sich Ost- und Westdeutschland noch einmal wiedervereinigen, oder glauben Sie das nicht?“ Bundesrepublik mit West-Berlin, Bevölkerung ab 16 Jahre.

Quelle: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1. 독일, 무엇을 배울 것인가?

- 독일 사회는 어떤 곳인가?
- 1990년 독일 통일은 기적이 아니라 독일 사회가 성취해낸 것
- 한국과 독일의 공통점, 1945년 분단, 두개의 분단 정부 수립
- 다른 사례에서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균형 있게, 오늘의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

2. 독일 통일 모델

- **독일 통일의 세가지 특성**

- ① 유럽 통합에 기반해, 유럽 통합과 함께 이뤄진 것
- ② 화해와 평화의 외교, 교류 협력의 확대와 지속에 의한 통일
- ③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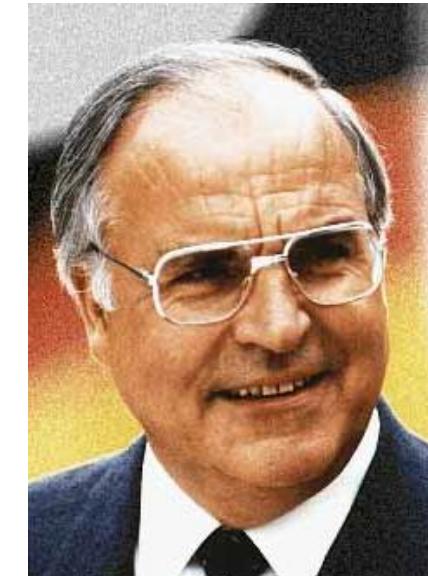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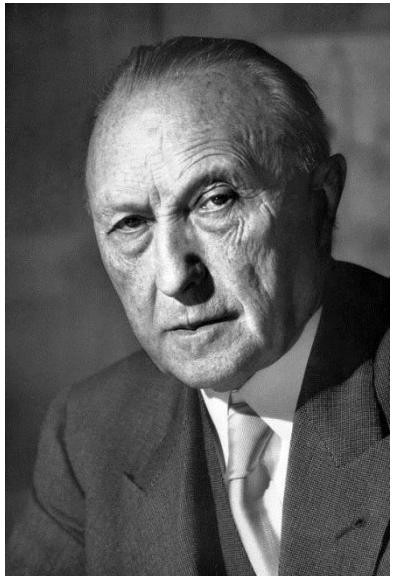
- 독일 모델이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을까?
- 어떤 것이 독일만의 역사적 조건이고, 어떤 것이 배울만 한가?

3. 독일 통일의 역사적 과정

• 독일 통일의 네 단계

서방정책 → 동방정책 → 독일정책 → 유럽통합

기간	1949~1960	1961~1969	1969~1982	1982~1998	1990~2017
집권당 수상	아데나워 기민당	키징어 기민당	브란트, 슈미트 사민당	헬무트 콜 기민당	슈뢰더, 메르켈 사민당, 기민당
주요 정책	힘의 우위 서방 정책 할슈타인독트린	수교, 무역 긴장완화 데탕트	신동방정책 수교, 교류확대 헬싱키프로세스	신냉전 통일협약 2+4 협약	Aufbau Ost 통합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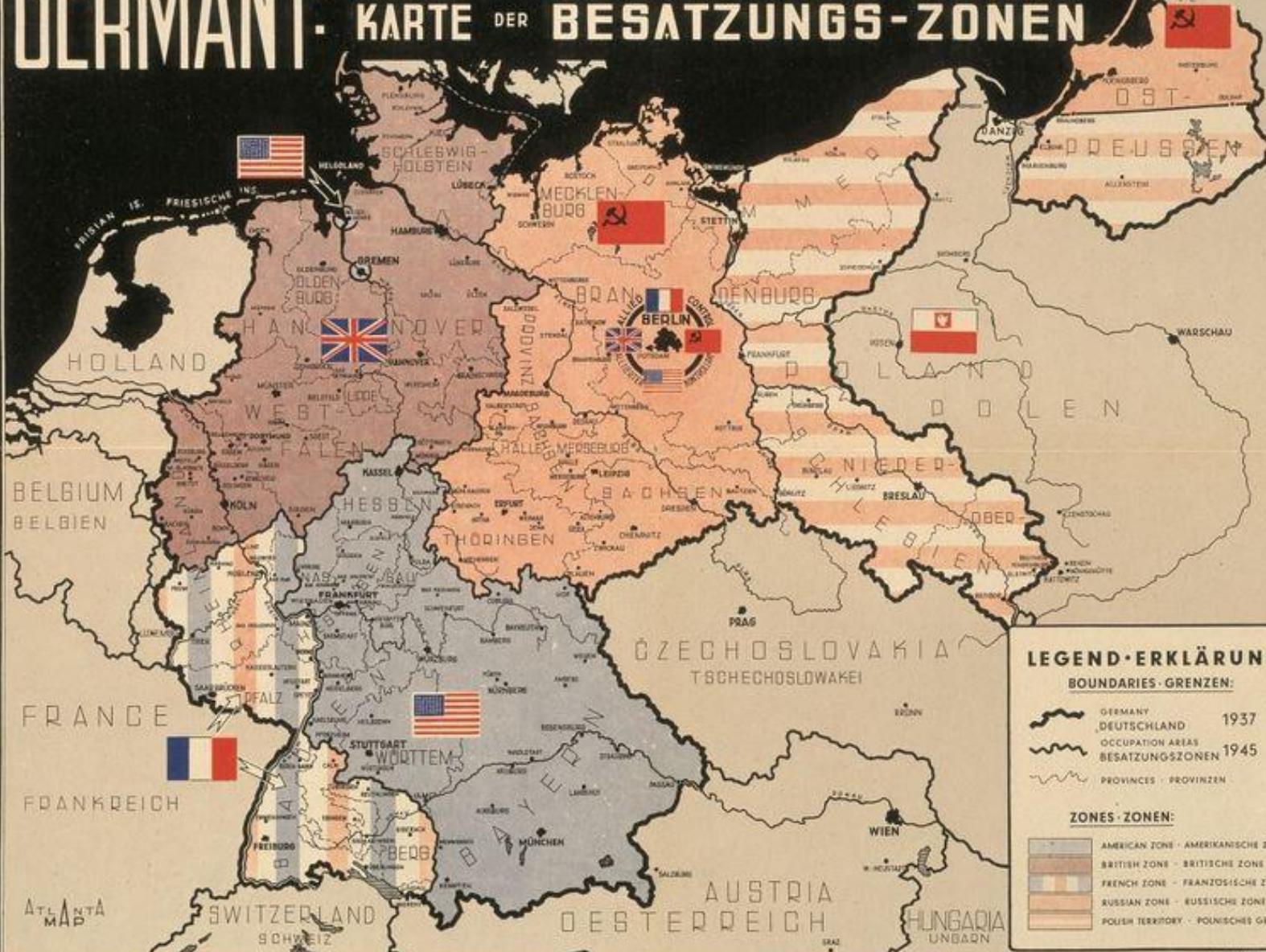
기간	1949~1960	1961~1969	1969~1982	1982~1998	1990~2017
집권당 수상	아데나워 기민당	키징어 기민당	브란트, 슈미트 사민당	헬무트 콜 기민당	슈뢰더, 메르켈 사민당, 기민당
주요 정책	힘의 우위 서방 정책 할슈타인독트린	수교, 무역 긴장완화 데탕트	신동방정책 수교, 교류확대 헬싱키프로세스	신냉전 통일협약 2+4 협약	Aufbau Ost 통합의 문제

4. 기민당 정부의 서방 정책

- 독일의 분단과 냉전 1945~1949
 - 독일은 1, 2차대전 전범국, 패전국,
 - 미·소·영·프에 의해 4등분
 - 1944년 모겐소 계획Morgenthau Plan “독일을 농업국가로”
 - 알타회담, 포츠담회담을 거쳐 분할점령, 주권 제약

GERMANY: MAP of the OCCUPATION AREAS

KARTE DER BESATZUNGS-ZONEN



LEGEND·ERKLÄRUNG

BOUNDARIES·GRENZEN:

- GERMANY DEUTSCHLAND 1937
- OCCUPATION AREAS BESATZUNGSZONEN 1945
- PROVINCES PROVINZEN

ZONES·ZONEN:

- | |
|--------------------------------------|
| AMERICAN ZONE · AMERIKANISCHE ZONE |
| BRITISH ZONE · BRITISCHE ZONE |
| FRENCH ZONE · FRANZÖSISCHE ZONE |
| RUSSIAN ZONE · RUSSISCHE ZONE |
| POLISH TERRITORY · POLNISCHES GEBIRG |

4. 기민당 정부의 서방 정책

- **기민당 아데나워 정부의 서방정책 1949~1963**
 - 1948년 6월 소련의 베를린 봉쇄
 - 1949년 5월 기본법을 제정하고 서독정부 수립
 - 1949년 10월 헌법을 만들고 동독 정부 수립
 - 콘라드 아데나워가 수상으로 선출 1949~63까지 14년간 재임
1) 서방 정책, 2) 힘의 우위 정책 Politik der Stärke, 3) 할슈타인 독트린 Hallstein Doktrin

〈표 2〉 아데나워의 서방정책과 서유럽 편입

1949. 9. 21	군사 점령 끝내고 고등 판무관으로 대체, 서독 주권 제약하는 <점령 규약 Besatzungsstatut> 발효
1949. 11. 22	페테스베르크 협정. 산업 시설 파괴를 중지하고, 서독이 국제기구 가입, 무역거래 할수 있게 됨
1951. 3. 6.	<점령 규약>을 완화하여 외무부 창설
1951. 4. 18.	유럽 석탄 철강공동체 조약 체결
1952. 5.	유럽방위공동체 설립에 대한 조약 서명
1952. 5. 26.	서독과 서방 연합군이 <독일 조약> 체결, 점령을 종식하기로.
1954. 8.	프랑스가 유럽방위공동체 조약을 비준 반대하여 무산
1954. 10. 19.	파리에서 다시 회담을 하고 서독 주권을 회복하는 파리 조약 체결
1955. 5.	파리조약이 발효되어 점령규약 폐기, 서독의 주권 회복

4. 기민당 정부의 서방 정책

- 안보위기와 아데나워 시대의 종식
 - 1958~1961년 베를린 위기, 베를린 장벽 설치
 -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 아데나워 지지율이 감소하고 서방정책 신뢰가 하락
 - 1961년 게하르트 슈뢰더 외무장관의 움직임의 정책 *Die Politik der Bewegung*
 - 아데나워는 슈피겔 사건, 기민당-자민당 분열로 1963년 10월 사퇴

5. 사민당 빌리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

- 과도기 에르하르트 정부

- 1963년 기민당 에르하르트가 수상으로 취임, 동서관계 개선
- 1963년 에곤 바의 투칭 연설, “**접근을 통한 변화 Wandel durch Annäherung**”

5. 사민당 빌리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

“접근을 통한 변화 [Wandel durch Annäherung](#)” (1963)

“긴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평화전략”
“동독은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
“동독 인정과 교류 협력을 통해 서독의 삶의 질을
보여주자”
“베를린 장벽은 두려움과 약함의 상징이다”
“기적을 기다리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

5. 사민당 빌리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

- 과도기 키징어 대연정 정부

- 1966년 에르하르트 정부는 모든 수교국가에 평화공한 *Friedensnote* 발송
- 1966년 11월 기민당-자민당 연정이 붕괴하고 게오르크 키징어가 수상으로 선출되어 자민당-기민당 대연정 수립
- 빌리 브란트가 외무장관 겸 부수상으로 취임, 동방정책 추진
- 1967~68년에 루마니아, 체코, 유고슬라비아 등과 수교, 무역

5. 사민당 빌리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

- **사민당 브란트 정부의 출범과 동방정책**
 - 1969년 10월 총선에서 42% 지지로 사민당-자민당 정부 수립
 - 빌리 브란트는 20년만에 사민당 집권 최초의 총리로 선출
 - 작은 걸음의 정책 *die Politik der kleinen Schritte* 표명
 - 1969년 미국에 리처드 닉슨 취임, 베트남전 종전 추진
 - 중소분쟁으로 미중관계 개선, 소련도 긴장 완화 추진

브란트의 동방 정책 (1969. 10. 28)

“우리는 감히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승배자들이 아니라 비판적인 민주주의자를 필요로 한다”

“우리 민주주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좋은 출발점에 서있다”

“우리는 우리 사회 내적으로도, 주변국가들에게도 좋은 이웃이 되겠다”

“독일문제는 유럽의 평화 질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독일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여 민족의 단일성을 유지하자”

“관계개선을 위해 동방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

“동서독 관계는 서로 외국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이다”

5. 사민당 빌리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

〈표 3〉 사민당 빌리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과 민주주의 확대

빌리 브란트의 신 동방정책의 성취		빌리 브란트의 민주주의 확대 정책	
1970.3~5.	동서독 정상회담 2회	1969	사회보장법 개혁, 질병 보험 확대 연금 수급 조정
1970. 8. 12	모스크바 조약, 소련과 무력 포기, 협력	1969/70	형법 개정, 간통죄, 낙태, 동성애 처벌 폐지, 집시법
1970. 12. 7	바르샤바 조약, 폴란드 영토, 과거 사과	1970	선거 연령 인하 (21세->18세)
1971. 9. 3	베를린 협정, 베를린 통행 교류 합의	1971	교육 제도 개혁(대학확충)
1971~1978	동서독 통과협정, 전화, 우편, 민간인	1972	노동자 공동결정권 확대
1972.12.21	동서독 기본조약,	1973	병역제도 개혁, 대체복무 확대
1973.9.18	동서독 유엔 동시 가입	1976	혼인/이혼법 개혁, 남성의 성 선택
1973. 6.20	프라하 조약, 체코와 수교	1979	가족법 개혁, 부모권위가 돌봄의무로 아동 권한 강화
1975. 8. 1.	헬싱키의 유럽안보협력회의 의정서 체결		

5. 사민당 빌리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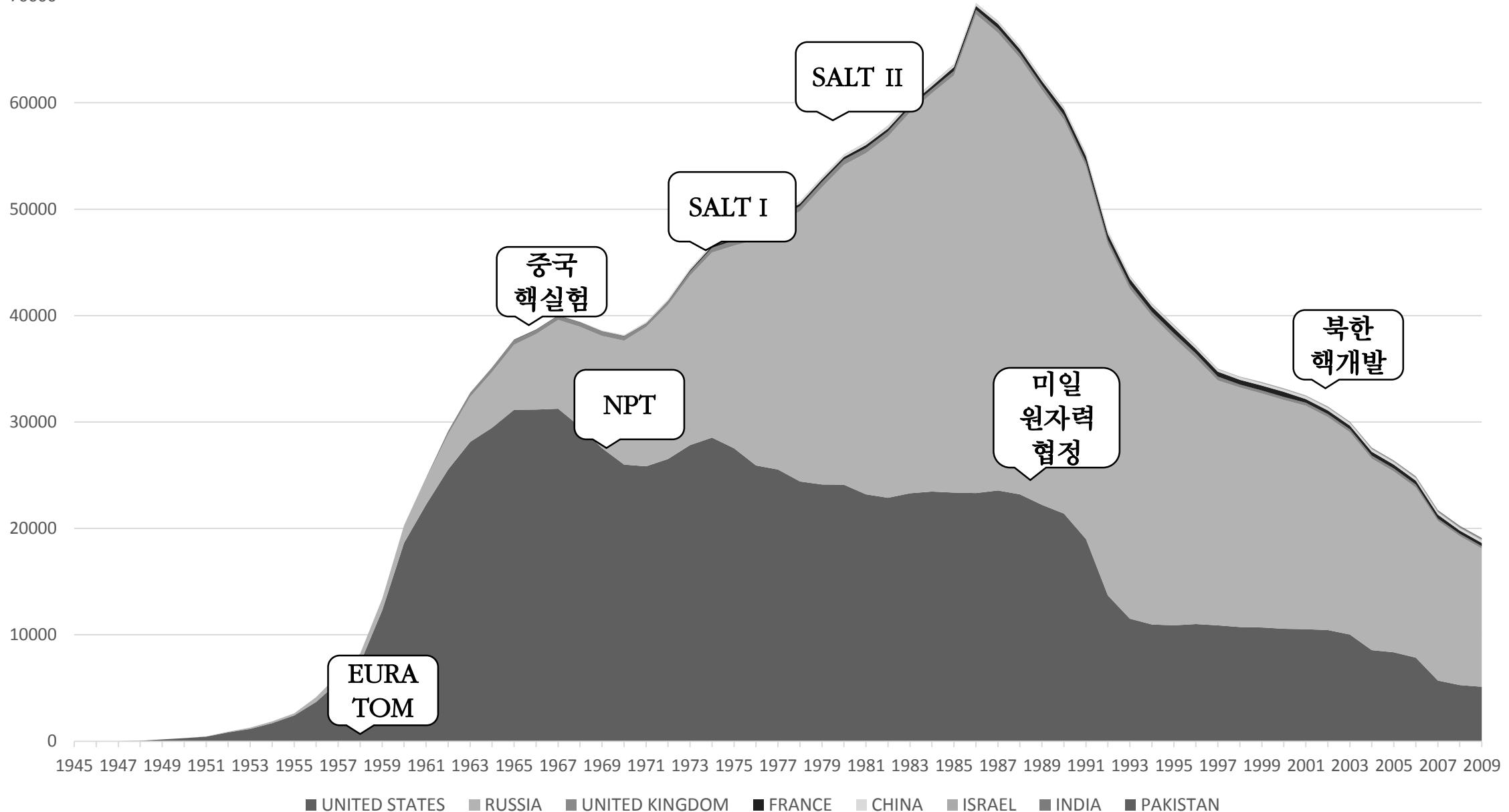
- 사민당 브란트 정부의 출범과 동방정책
 - 1971. 12. 브란트는 노벨 평화상 수상
 - 기민당이 반대했지만, 1972년 11월 총선에서 압승
 - 그러나 1973년 오일 쇼크로 경제상황 악화
 - 1974년 5월 동독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총리직 사퇴 (5년)

5. 사민당 빌리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

- **사민당 헬무트 슈미트 정부와 핵위기**

- 1974년 5월 사민당 헬무트 슈미트가 수상으로 선출
- 사민-자민 연정이 1982년 9월 까지 지속 (13년)
- 1970년대 후반 소련의 군비 경쟁 강화로 동독, 체코에 핵배치
- 1979년 12월 NATO가 서유럽에 핵배치 결정
- 1983년 서독에 퍼싱 2,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에 배치
-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1983년 11월 서독에 핵무기 배치

그림 5. 세계 핵무기의 수 추이 (1945~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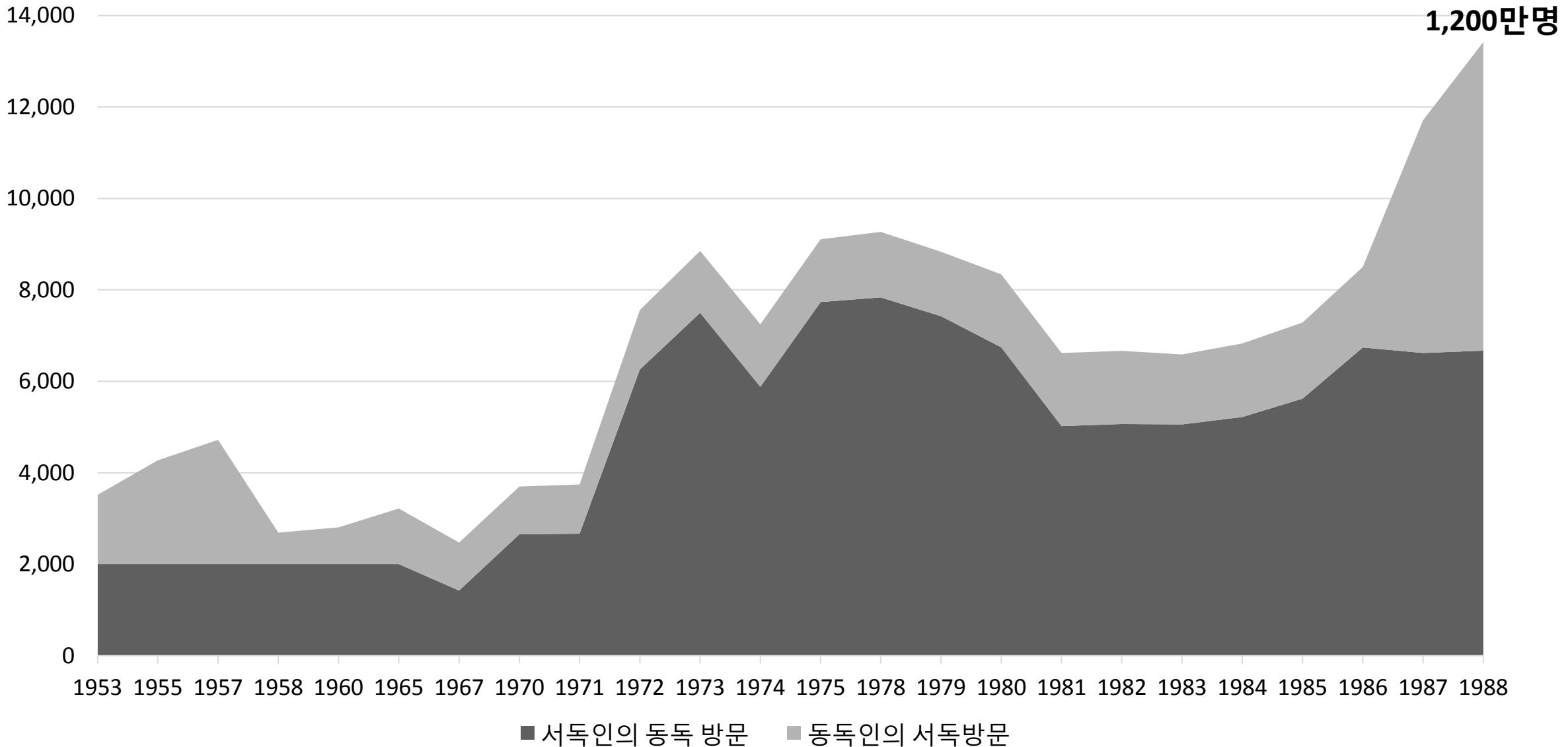


6. 헬무트 콜 정부의 독일 정책과 독일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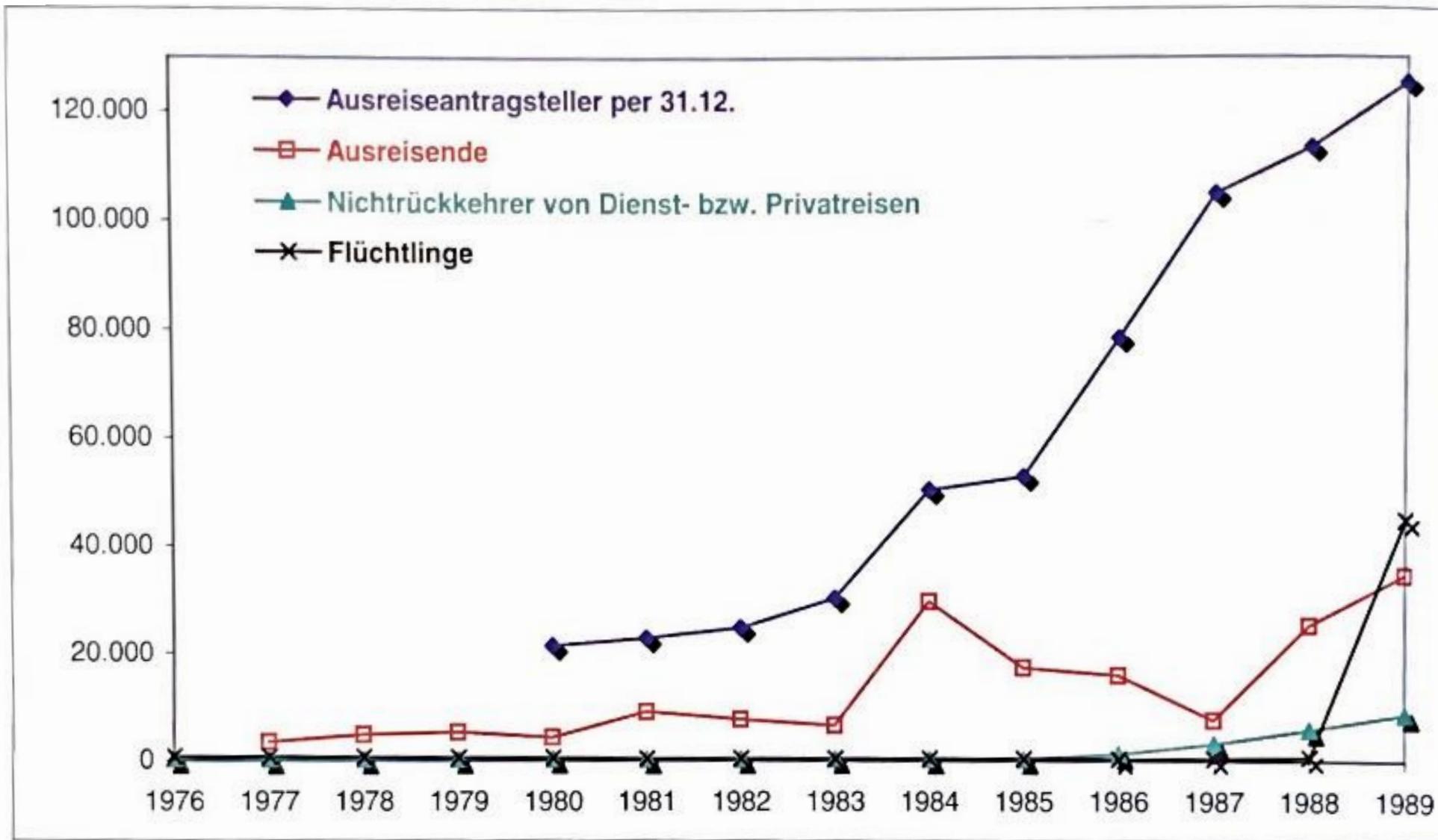
- 헬무트 콜의 독일 정책

- 1982. 10. 기민당 헬무트 콜이 수상으로 선출
- 동서독 교류는 지속. 1983년 11억, 1984년 9억 마르크 차관
- 동독은 이산가족 재회, 방문 조건 완화
- 동서독 무역도 꾸준히 증가 동독 무역액의 10%
- 1984년 콜과 호네커의 정상회담
- 1987년 9월 호네커의 서독 방문, 인적/경제교류 폭발적 증가

동서독의 인적 교류 현황 (단위: 천명)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와 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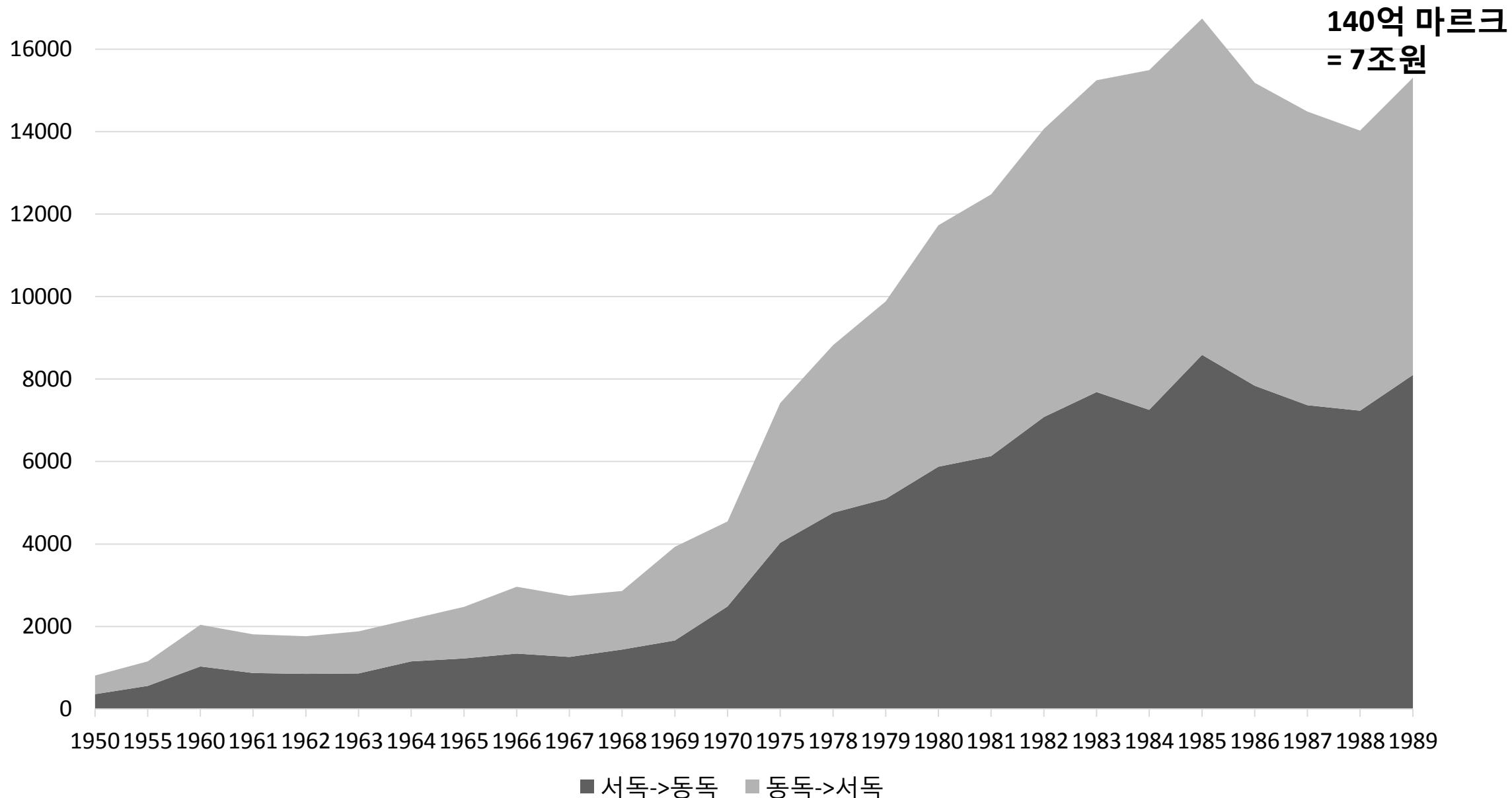


Quelle: Eisenfeld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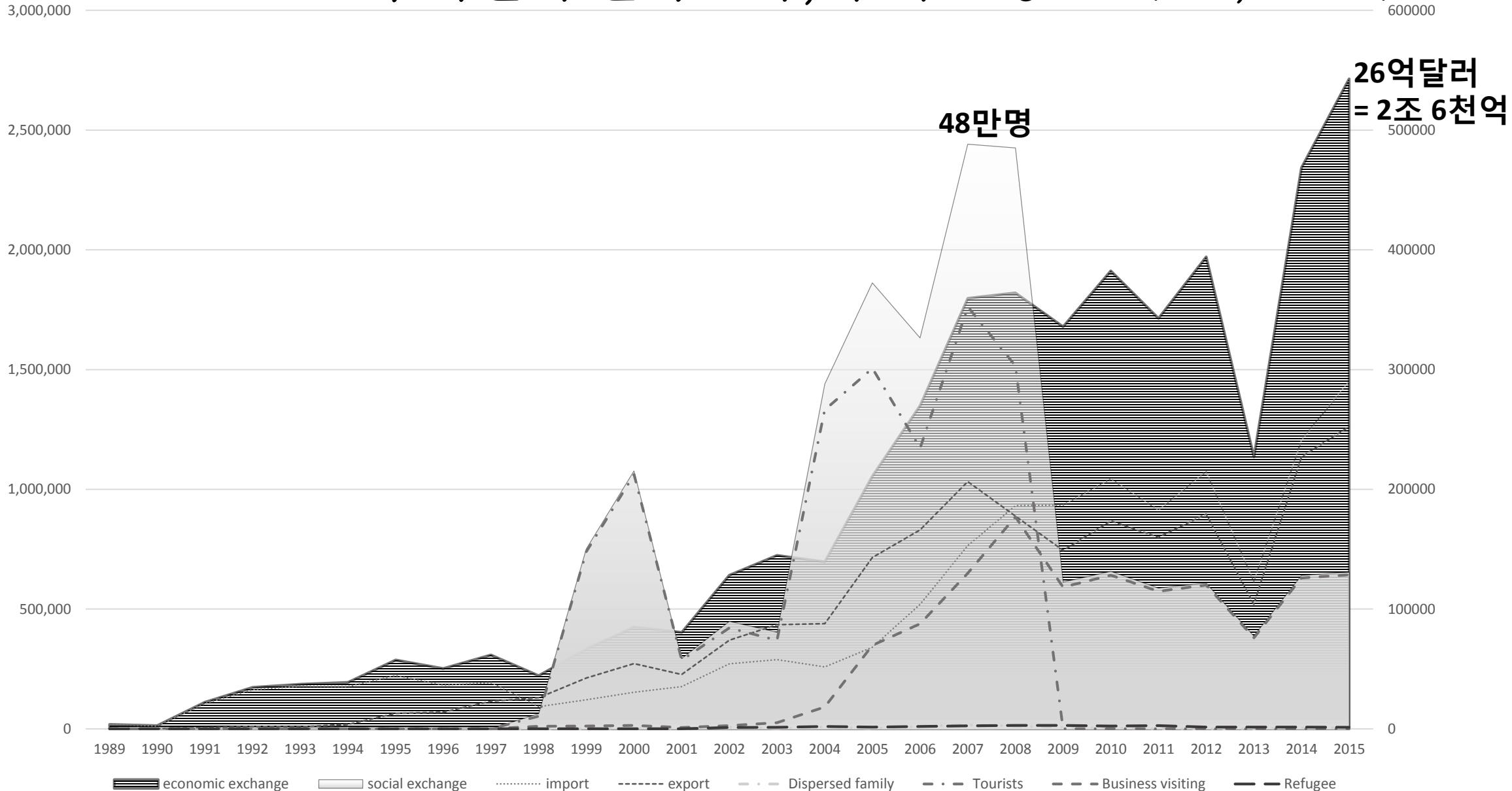
동서독의 우편 교류 현황



동서독의 무역 교류 현황 (단위: 백만마르크)



남북한의 인적 교류, 무역 현황 (단위: 명, 천달러)



6. 헬무트 콜 정부의 독일 정책과 독일 통일

• 동유럽 민주화와 독일 통일 1989~90

- 수십년간의 경쟁+교류 협력으로 소련, 동유럽의 개혁, 민주화
- 1985년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개방, 군비축소
- 1989년 6월 폴란드에서 자유선거로 자유노조연합 승리
- 1989년 10월 헝가리가 개헌 후 헝가리 공화국으로
- 1989년 동독은 체제전환을 거부하다가 동독인들의 대탈출
- 10월 전국의 개혁요구 시위, 11월 9일 여행 자유화, 장벽붕괴



Oct 1989, in Leipzig



Platz des 9. November 1989

6. 헬무트 콜 정부의 독일 정책과 독일 통일

- 독일 통일의 완성 1990

- 1989년 12월 콜 수상의 10단계 통일 방안
- 1990년 2월 독일 통일 위원회 구성
- 1990년 3월 동독의 총선
- 1990년 5월 화폐, 경제 조약 체결 (1:1 환율)
- 1990년 8월 동서독 통일 조약 체결
- 1990년 9월 국제 승인을 위한 2+4 조약 체결, 10월 3일 통일



Die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trat am **1. Juli 1990** aufgrund eines Staatsvertrages



Zwei-plus-Vier-Vertrages am 12. September 1990 in Moskau

7. 독일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독일 통일의 외적 조건

- 2차대전 패전국 4개국 점령
- 유럽의 냉전 종식
- 유럽의 시장통합 지역 공동체
- 소련 붕괴와 동유럽 민주화
- 소련 종속적 동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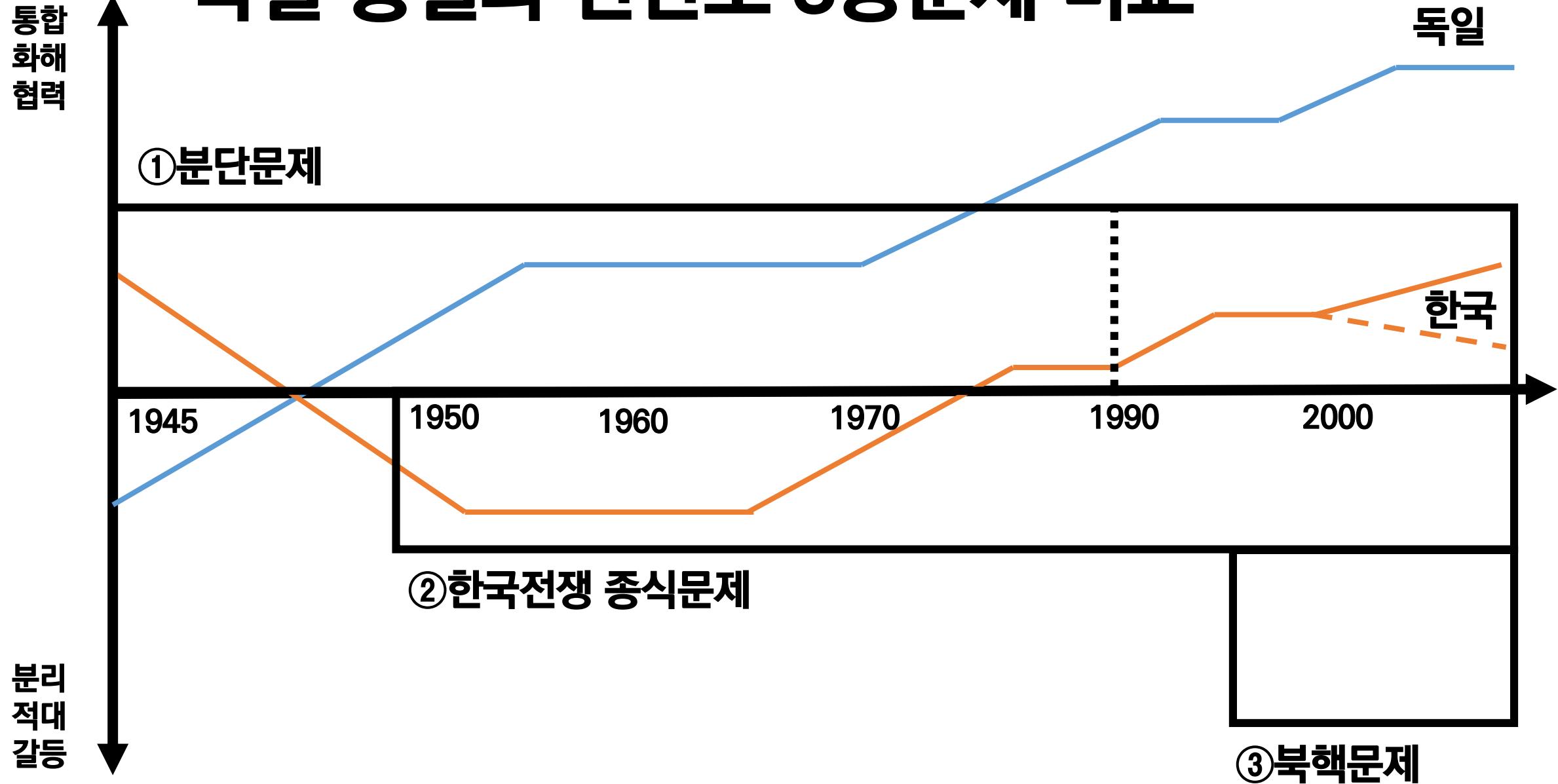
- 한국 분단의 외적 조건

- 미소 분단, 3년간의 한국전쟁
- 아시아의 중-미 대립지속
- 아시아 패러독스
- 중국식 점진적 개혁개방
- 우리식 사회주의, 핵무장 북한



강력한 한국중심주의적 내적 컨센서스 구축
친미, 친중, 친북, 친일 지양

독일 통일과 한반도 3중문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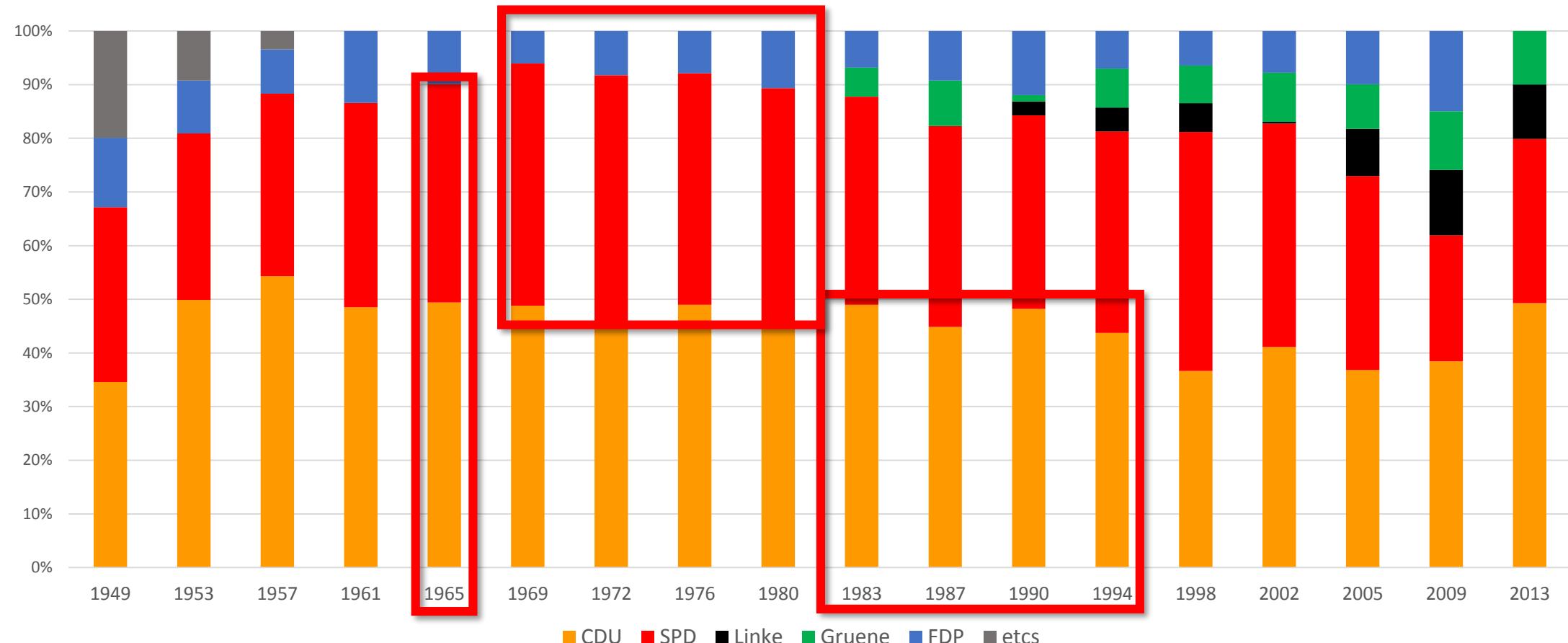
7. 독일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독일 통일의 내적 조건

기간	1949~1960	1961~1969	1969~1982	1982~1989	1990~2017
집권정당 수상	아데나워 기민당	키징어 기민당	브란트, 슈미트 사민당	헬무트 콜 기민당	슈뢰더, 메르켈 사민당, 기민당
서방정책					→
NATO					→
할슈타인	▪▪▪▪▪▪▪▪▪▪▪▪	▪▪▪▪▪▪▪▪▪▪▪▪→			
동방수교					→
교류협력					→
갈등 위기	베를린 봉쇄 군사동맹	베를린 위기 쿠바 위기		핵무기 배치 신냉전	

동방정책 추진당시 독일정부/정당 지지율

도표 1. 역대 독일 총선의 정당별 지지율 변화(1949-2013)



Source : Der Bundeswahlleiter (2015), *Ergebnisse früherer Bundestagswahlen*, Wiesba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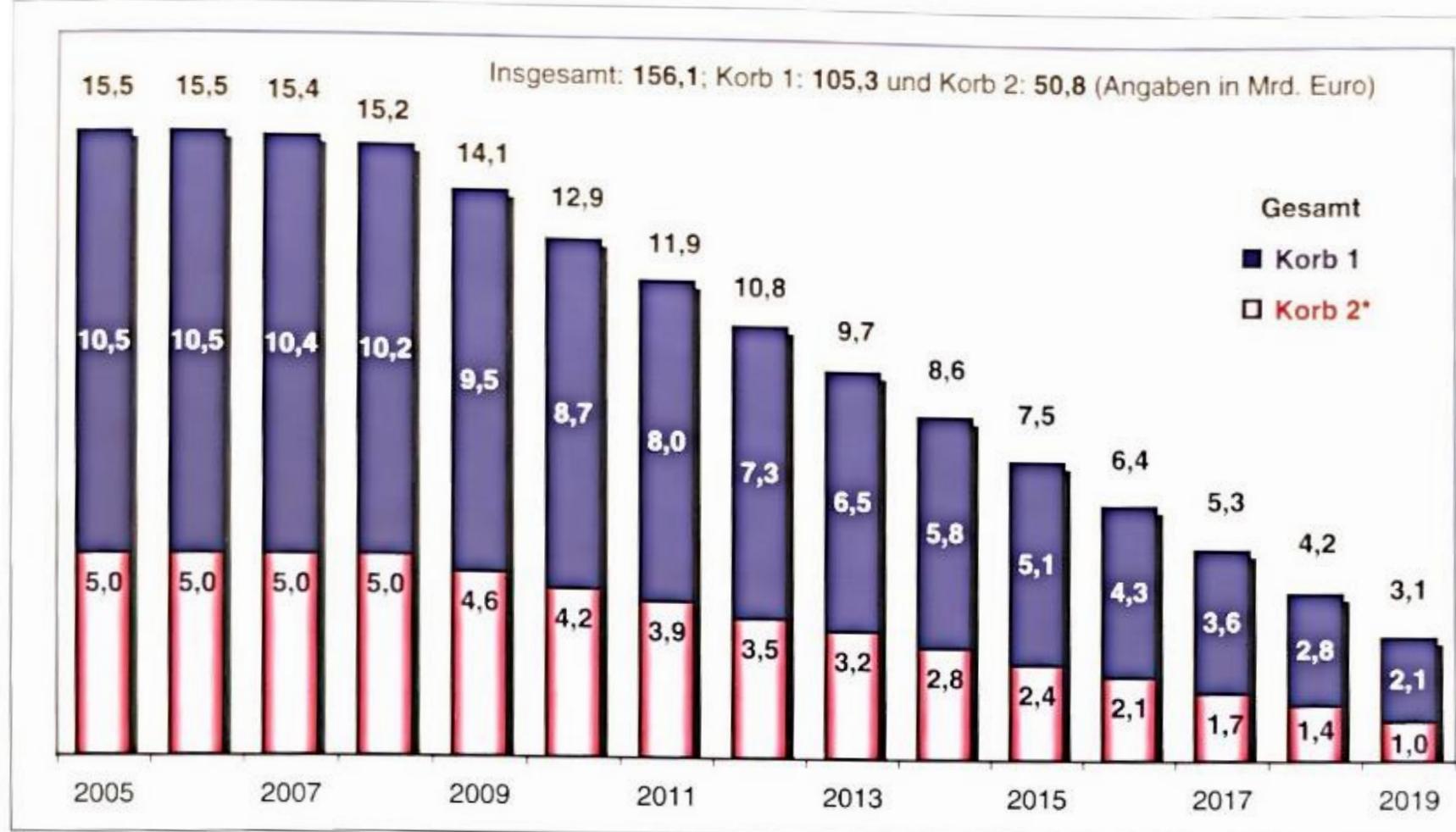
참고. 독일 통일 이후의 과제들

• 독일 통일이후의 과제

- 1) 독일의 주권 회복
- 2) 동서독 주둔 외국군 철수
- 3) 동독 대외 관계 처리
- 4) 군사분야 통합
- 5) 헌법 개정
- 6) 베를린으로 수도 이전
- 7) 동독 행정기관 근무자 처리

- 8) 동독 독재 과거 청산 정책
- 9) 동독의 재산 문제 처리
- 10) 동독 경제 제건 계획
- 11) 통일 비용 조달 정책
- 12) 동독 시장화와 기업 사유화
- 13) 실업자 대책, 복지 개편
- 14) 환경문제 개선 조치
- 15) 사회내적 통합 조치

Abb. 29: Solidarpakt II (총 1,561억 유로 = 19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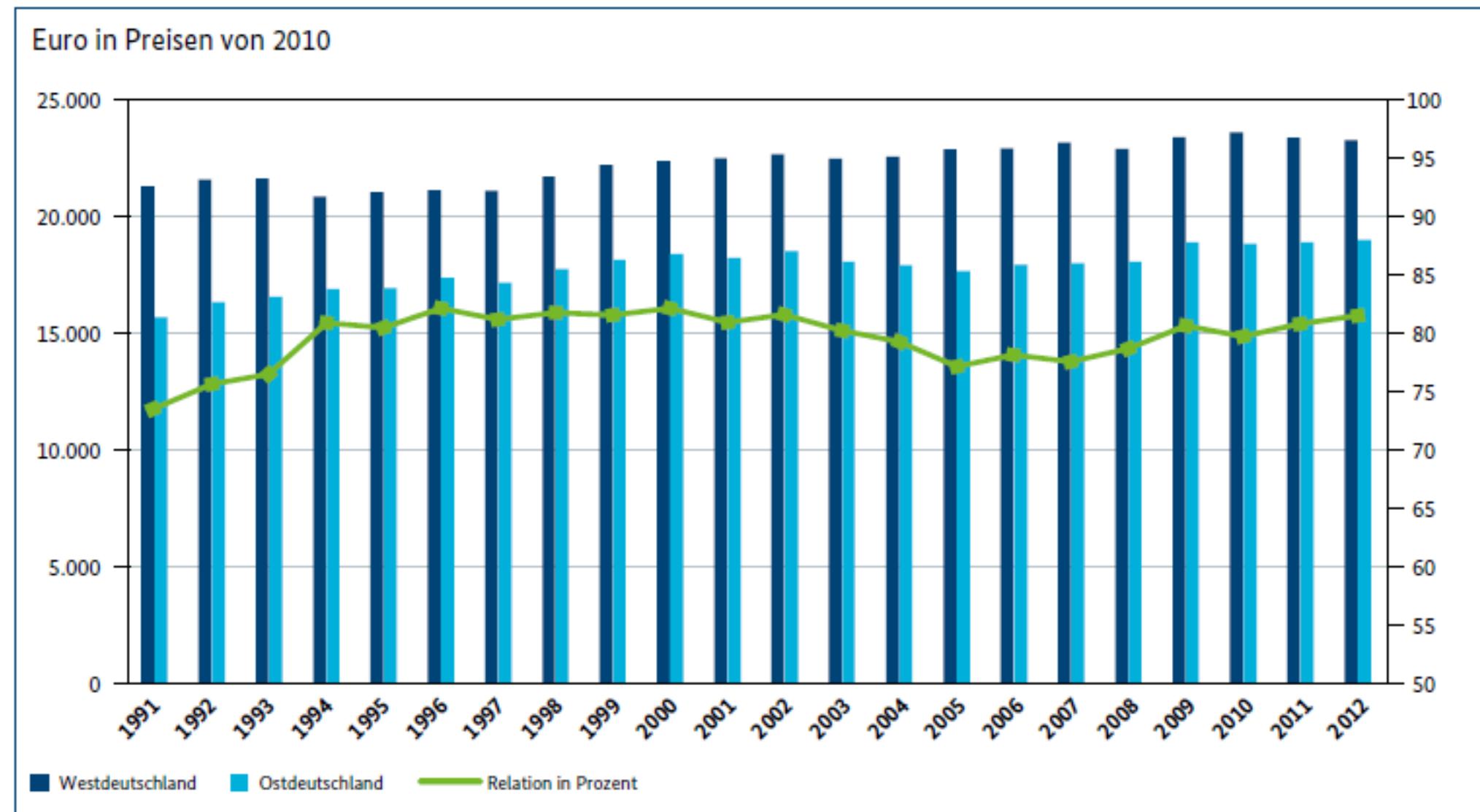


Korb 1: auf dieses Geld haben die ostdeutschen Länder einen Rechtsanspruch, Raten sind bereits festgelegt;
 Korb 2: freiwillige Selbstverpflichtung des Bundes, dessen Beitrag für „überproportionale“ Investitionen im Osten auszugeben.

* Zahlungsweise steht noch nicht fest, unterstellt sind gleiche Raten wie für Korb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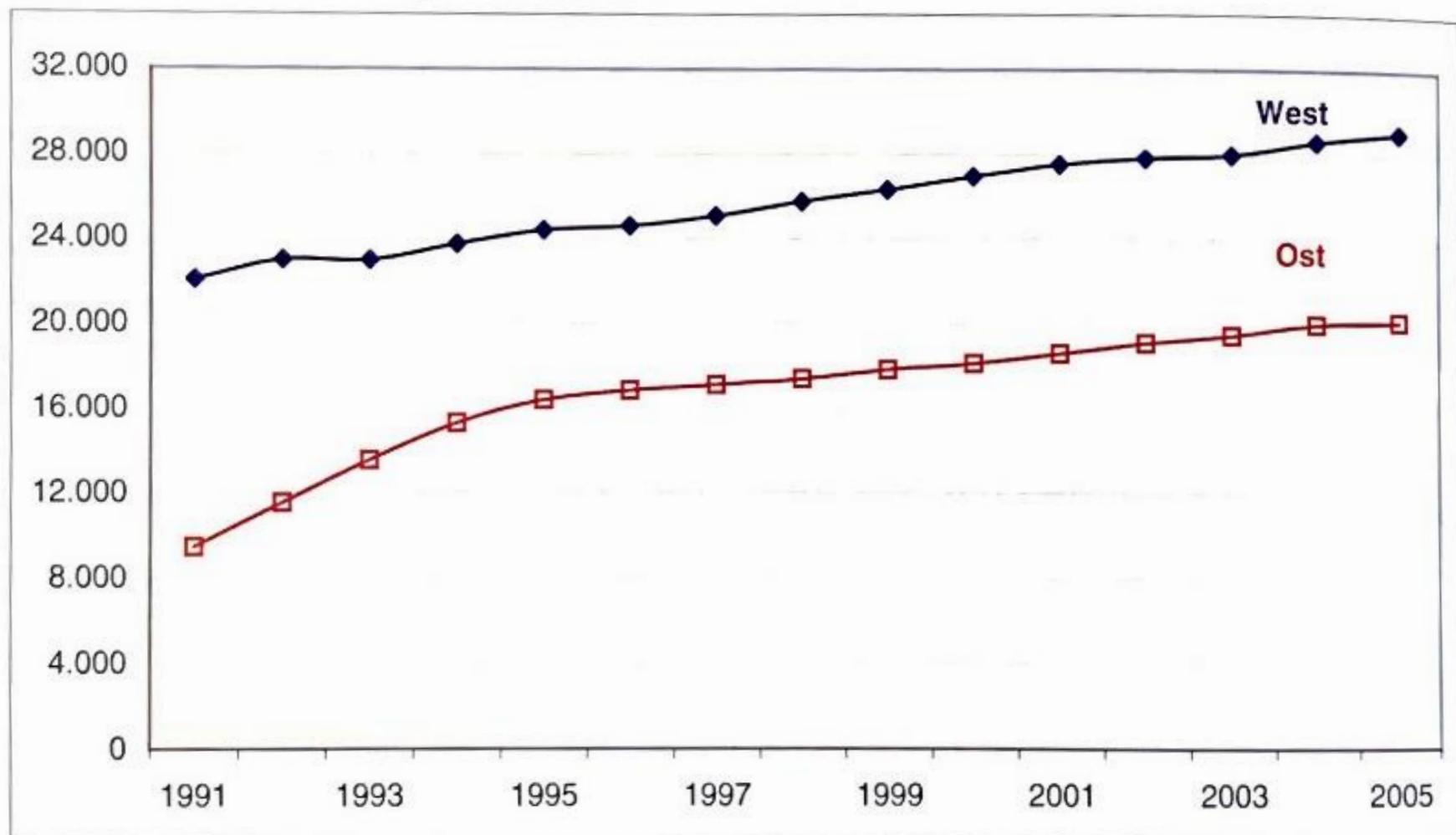
Quelle: Die Welt vom 30. Dezember 2004

Abbildung 5: Äquivalenzgewichtetes Jahresnettoeinkommen



Quelle: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Sozio-oekonomisches Panel (SOEP-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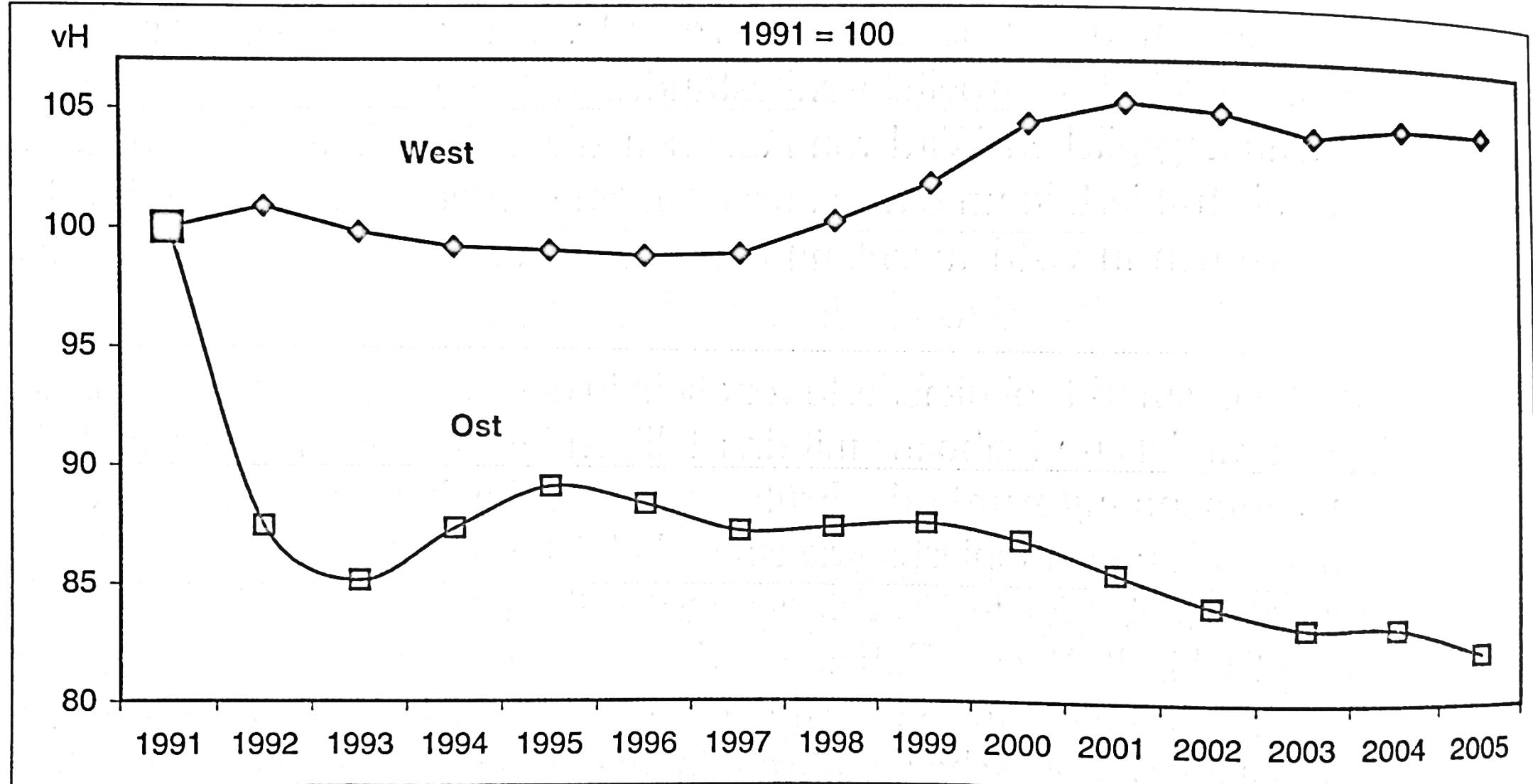
Abb. 13: Entwicklung der Wirtschaftskraft 1991-2005



Bruttoinlandsprodukt in Halbjahresergebnissen je Einwohner in West- und Ostdeutschland in Euro zu jeweiligen Preisen. Berlin wurde Ostdeutschland zugerechnet

Datenbasis: Statistisches Bundesamt; Arbeitskreis VGR der Lä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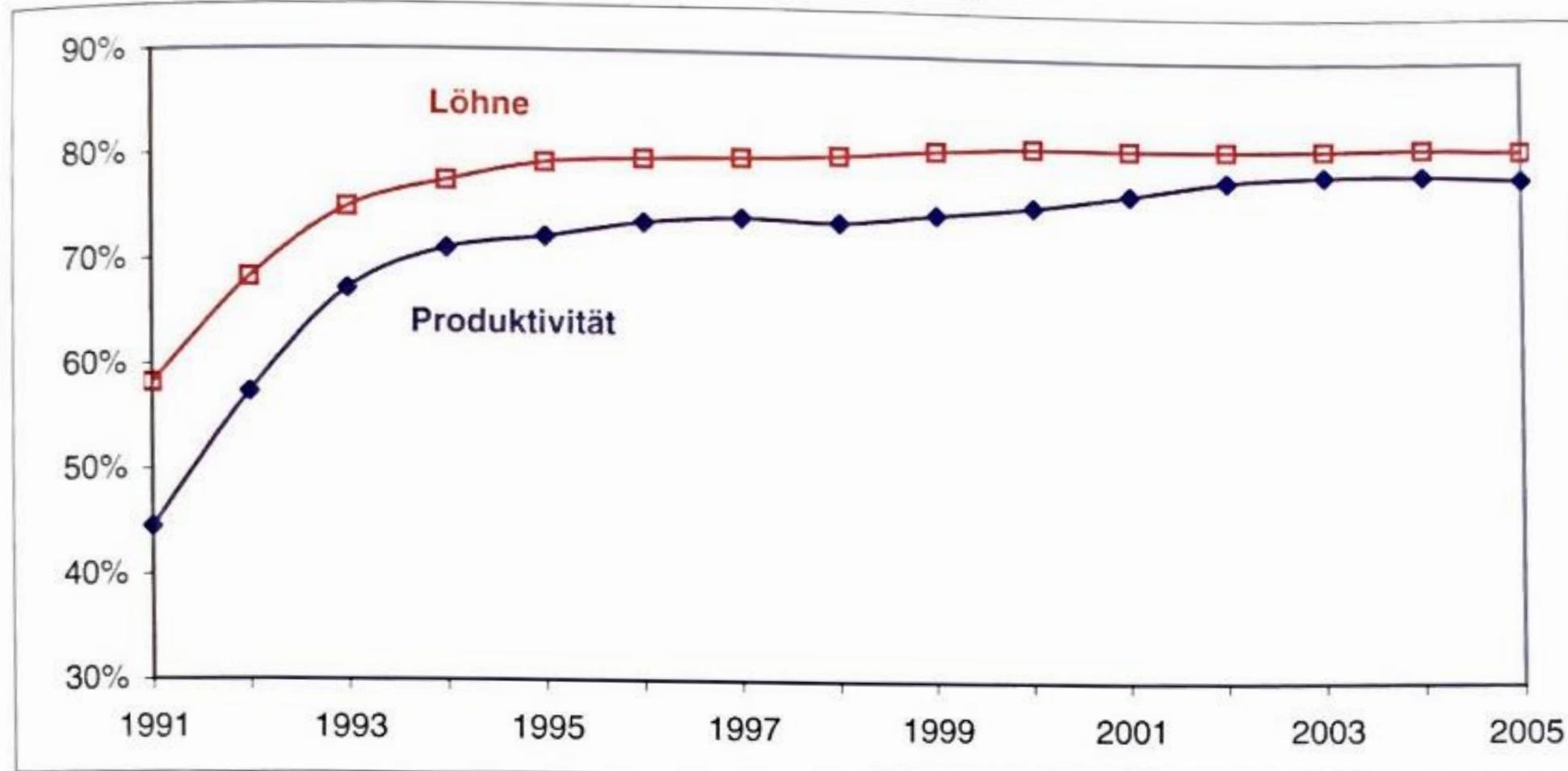
Abb. 20: Entwicklung der Erwerbstätigkeit im Ost-West-Vergleich



West einschließlich Berlin, Ost ohne Berlin.

Quelle: Arbeitskreis der VGR der Länder

Abb. 16: Löhne und Produktivität im Ost-West-Vergleich



BIP je Erwerbstätigen und Bruttolohn- und Gehaltssumme je Arbeitnehmer. Berlin wurde Ostdeutschland zugerechnet West = 100%.

Datenbasis: Arbeitskreis VGRD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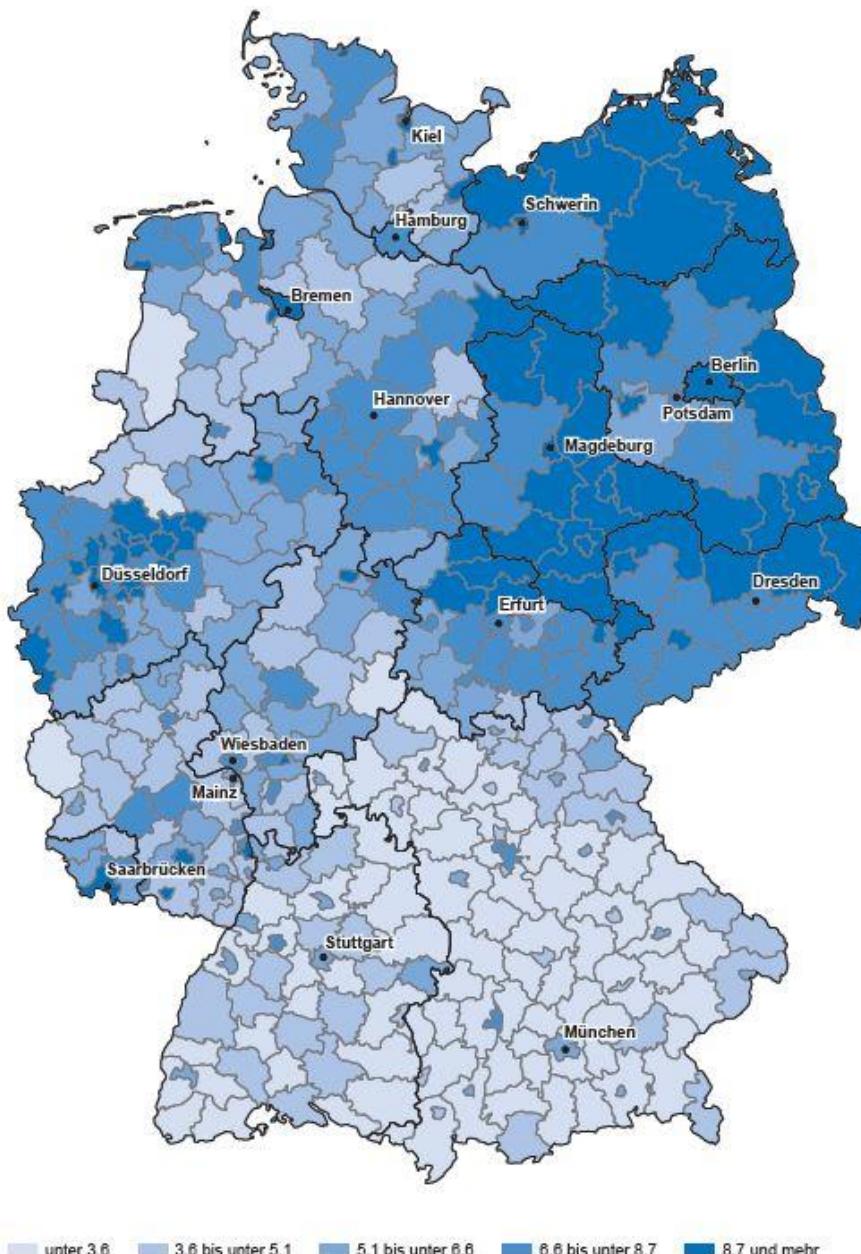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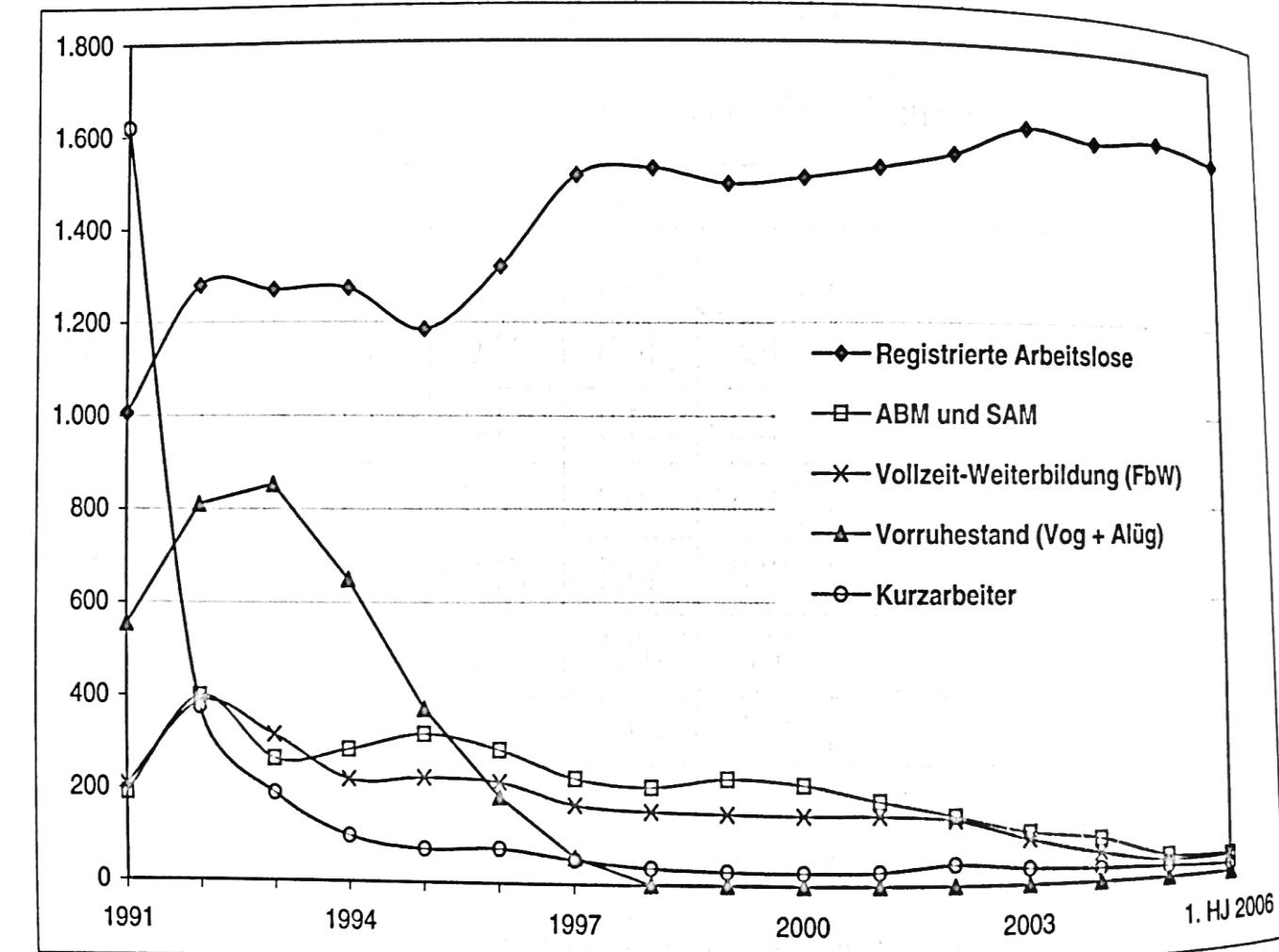


Abb. 19: Arbeitsmarktdaten der neuen Bundesländer 1991–2006



Neue Bundesländer einschließlich Berlin. In Tausend Personen.
Quelle: IAB

다양한 분단과 통일 유형

- **독일식 통일/통합의 특성**

- 70년대 이후 교류 협력(경제, 인적)에 의한 통일
- 정치적 통합, 정치적 리더십
- 통일 후 동서독 지역의 격차 지속

- **중국식 일국양제와 통합지수**

- 경제적 협력우선, 정치적 공존
- 양안의 경제교류, 인적 교류
- 불균형 통합의 사례

- **베트남식 통일/통합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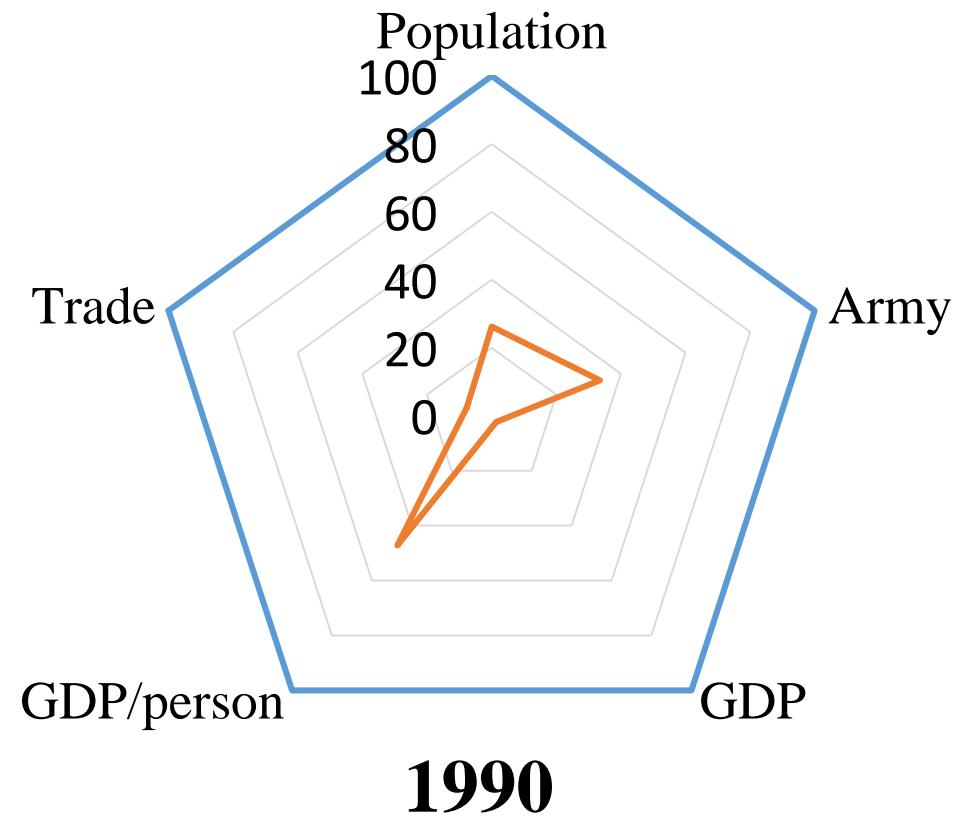
- 75년 평화협정 이후 무력통일
- 86년 도이마이 이후 개혁개방
- 남북 베트남 내부 격차의 문제

- **한반도식 통일과 통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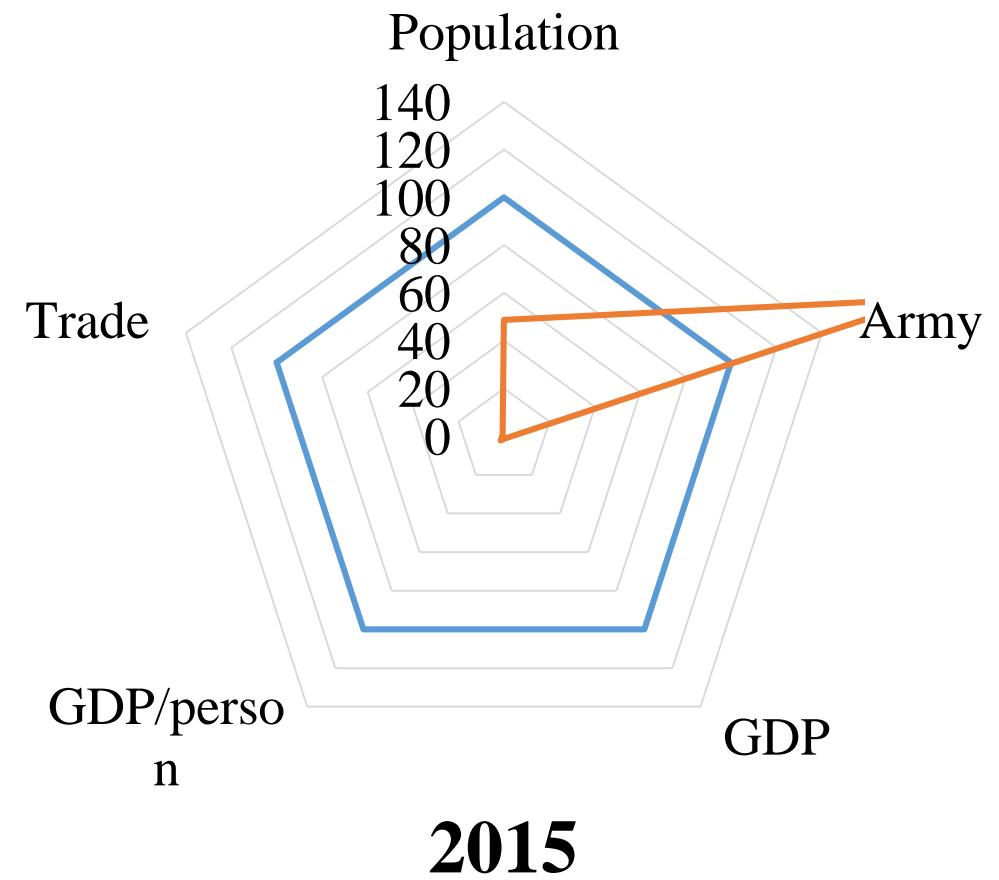
- 1990년까지 체제경쟁, 정치통일 추구
- 9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교류 추구
- 2007년 이후 사회경제적 관계 단절
- 안보갈등, 경제 단절, 정치적 이질화

동서독과 남북한의 국력 비교

—West Germany —East Germany



—South Korea —North Korea



다양한 통일 모델의 역사

• 독일의 흡수통일

- 체제경쟁에서 동유럽이 패배, 아래로부터 민주화, 서독으로 흡수통일,
- 서독의 제도 이식, 동서독의 격차가 30년간 지속됨

• 베트남의 무력 통일

-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로 베트남전 종식, 내전이 재발하여 무력통일
- 남베트남의 시장경제가 확대되어 개혁개방 추진

다양한 통일 모델의 역사

•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

- 1960년대 독일/소련식 연방제 주장, 체제경쟁 맥락에서 적화통일/정치 통일불가
- 정치통합 거부하고, 점진/단계적 교류협력 선호, 남북격차가 커지며 교류주저

• 한국의 통일안

- 체제 경쟁의 맥락에서 남한체제의 승리 혹은 흡수 통일을 추구
- 한민족공동체 통일안은 기능주의적 협력을 거쳐 하나의 국가 수립
- 김대중의 3단계 통일안은 절충적이고 장기적으로 각각의 자율성 보존 지향

“어떤 단계와 유형을 상정하건, 정치 통일은 커녕 경제적 교류협력도 단절된 상황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일의 모습과 과정을 재검토할 필요”

통합 이론과 동아시아 통합의 유형

- 이식 *Transplantation*과 적응 *Adaptation*

- Tereza Novotna (2015), 독일 통일과 체코의 EU 통합 비교
- 독일 통일은 이식 *Transplantation* 모델
- 체코 통합은 적응 *Adaptation* 모델
- 이식 모델은 속도가 빠르고, 이식을 수용하는 측에서 탑-다운 리더십으로 결정
- 적응 모델은 오랜 시간 점진적, 통합 전에 민주화, 아래로부터 국민투표를 통해
- 이식 모델과 적응 모델에서는 각 제도가 변화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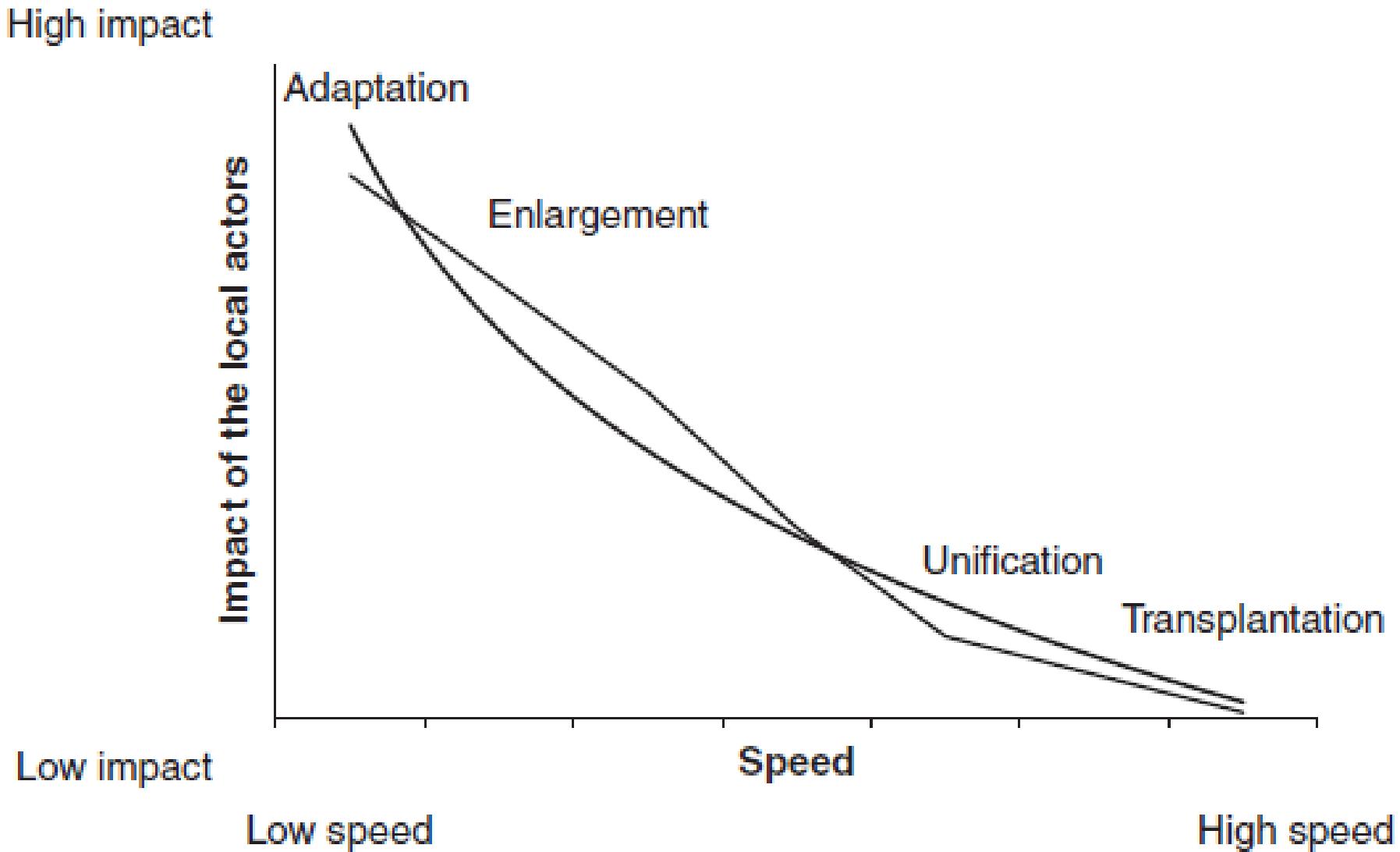


Figure 2.1 Negative correlation of speed and impact of the local actors on political integration

통합 이론과 동아시아 통합의 유형

• 균형적 통합과 불균형적 통합

- Mikael Mattlin (2005) 유럽통합, 독일 통일, 영국 통합, 양안 통합 차이 구분
- 정치적 정체성 공유(Shared Identity)+경제적 상호의존(Economic dependence)
- 균형적 통합 Symmetric integration은 둘다 높은 수준
- 불균형 통합 Asymmetric integration은 어느 한쪽이 낮은 수준
- 다섯 가지 유형의 통합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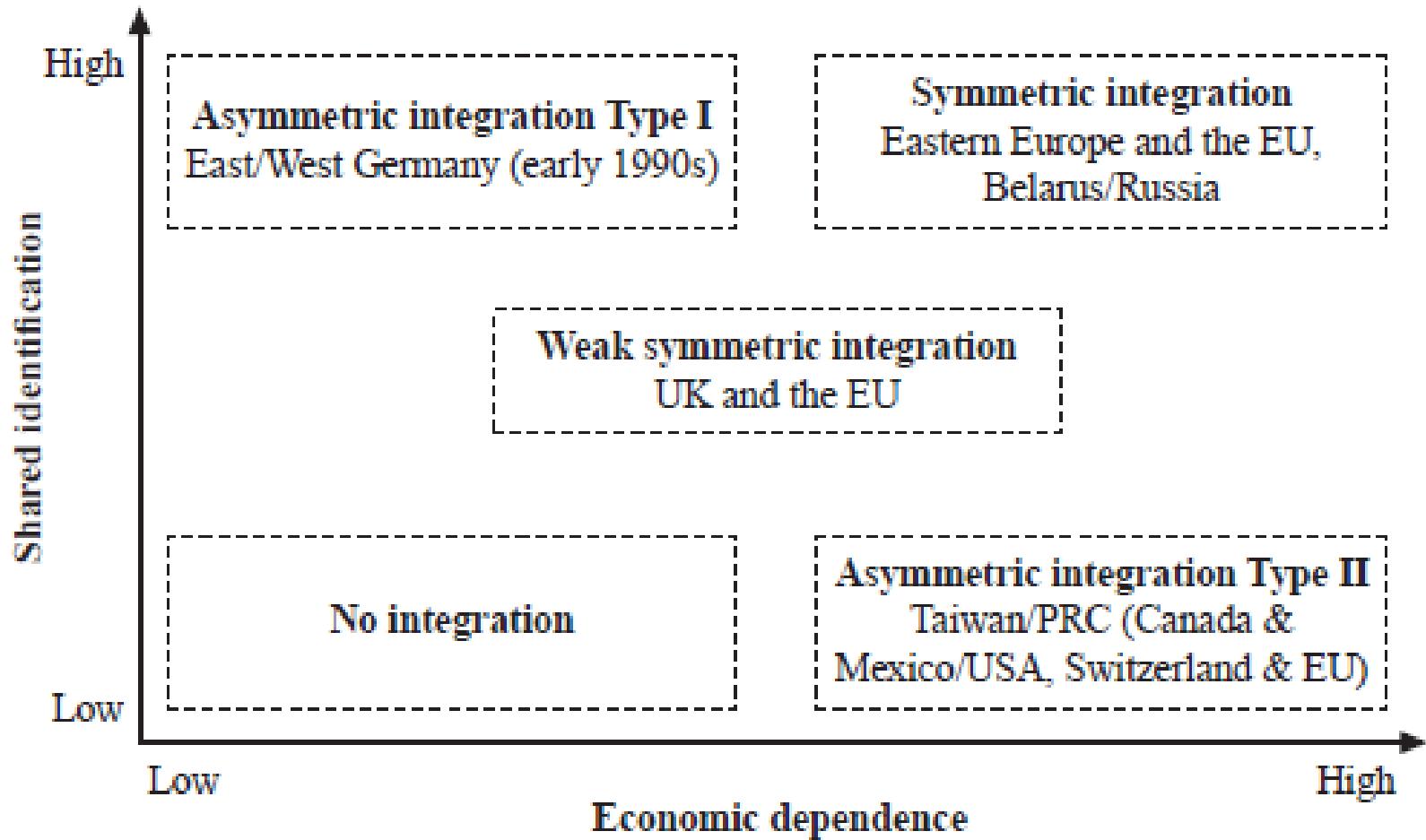


FIGURE 1.
Five Theoretical Integration Constellations Derived from Empirical Cases. Axes Denote Background Conditions for Integration

Mikael Mattlin (2005),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Integration: Asymmetric Integration and Symmetricity Tendencies” , *Cooperation and Conflict* 40(4): 403-421.

통합 이론과 동아시아 통합의 유형

• 불균형 통합의 문제들

- 정치적 통합이 우선한 <불균형 통합 ①>: 독일 모델

경제적으로 통합을 감당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됨

- 경제적 통합이 우선한 <불균형 통합 ②>: 양안 모델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상대의 경제적 영향력을 받아야 함

- 1) 안보 갈등(평화), 정치 통합, 경제 통합 중 어느 것이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나?
- 2) 안보 갈등은 정치통합, 경제통합 모두를 저해함
- 3) 경제통합이 진전되어도 정치통합이 안되면, 안보, 정체성 요소가 더 중요한 것

남북 통일과 통합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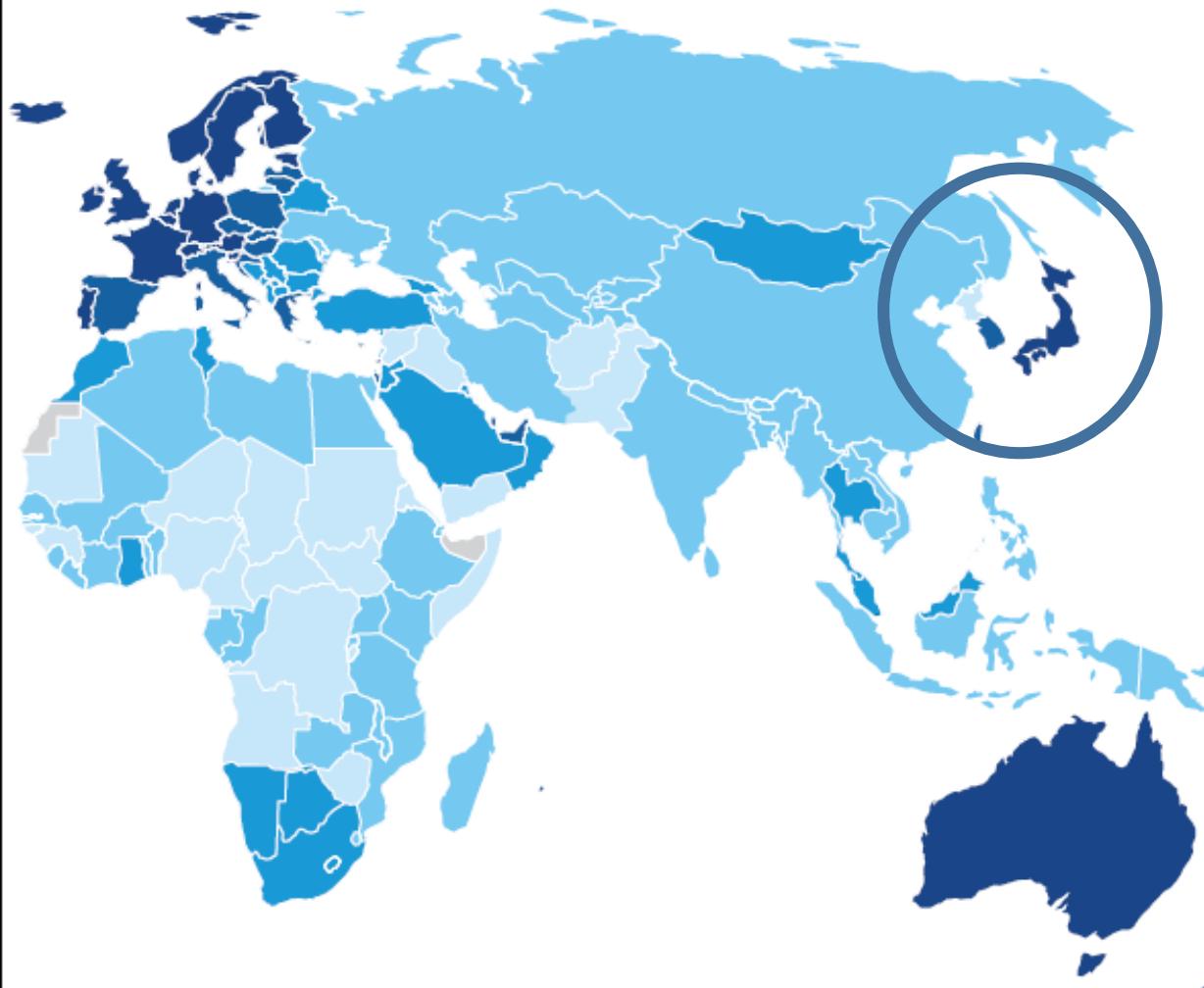
- 남북한은 현재 정치, 경제적 통합이 전혀 없음
- 앞으로 북한은 중국 경제로 불균형 통합 이뤄질 가능성 큼
- 한국은 한미일과 정치적 정체성을 공유한 채, 범중국 경제권으로 약하게 불균형 통합이 이뤄질 것
- 남북한 통합이 이뤄지려면 1) 안보갈등이 사라지고 2) 오랜기간 경제교류로 점진적 경제통합을 이루며, 3) 동시에 공동의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 4) 오랜 후에 정치통합을 지향, 5) 이 과정에서 북한이 자율적으로 적응Adaptation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2015 POSITIVE PEACE INDEX

GLOBAL LEVELS OF POSITIVE PEACE

THE STATE OF POSITIVE PEACE

- Very high
- High
- Medium
- Low
- Very low
- Not included



- Japan, 17th
- United States, 19th
- South Korea, 30th
- Taiwan, 42nd
- China, 85th
- Russia, 93rd
- North Korea 141st





“냉전의 박물관”
판문점, DMZ, 유엔군사령부
지상군과 징병제



1953. 7. 27. Panmunjom

7/22/51

朴正熙

Mark W. Clark

KIM IL SUNG
Marshal,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preme Commander,
Korean People's Army

PENG TEH-HUAI
Commander,
Chinese People's
Volunteers

MARK W. CLARK
General, United States
Army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PRESENT

M.W.J.

NAM IL
General, Korean People's Army
Senior Delegate,
Deleg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W K Harrison

WILLIAM K. HARRISON, JR.
Lieutenant General, United States
Army
Senior Delegate,
United Nations Command Delegation









CHINA CULTURE.ORG
中国文化网





2006년 9월, 베이징 6자회담





평화 안식년 으로서의 2018년

- 반복되는 4월위기, 8월위기, 10월위기
- 군사훈련, 핵실험, 미사일 발사, 정부 예산 심의, 국가 기념일, 선거와 정치 갈등
- 주기적인 위기 고조를 사전에 예방하기
- 2018년을 동아시아 평화 안식년으로

세가지 차원에서의 “봄이 있는 삶”

- 1) 지정학적 갈등으로 빼앗긴 봄: 긴장완화, 평화 회담
- 2) 국내 정치적 갈등으로 빼앗긴 봄: 개헌과 성숙한 정치
- 3) 미세먼지와 환경 오염으로 빼앗긴 봄: 동북아 환경 회의

남북한 평화 구축의 과제들

- 4월 남북, 5월 북미정상회담, 8월 군사훈련, 9월 9일 북한 기념일, 그리고 9월 유엔 총회
- 정상회담의 시간표, 실무회담의 시간표짜기
- 부정적 가능성도 고려한 시나리오 검토, 9월 이후 시간표도
- 정상회담의 정례화 가능성과 확대 가능성(북미, 한미, 한일, 남북미, 일본, 중국 포함 3자, 4자, 5자 정례회담)
-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어떤 군사충돌 없다.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차이가, 다시는 우리의 미래의 우정과 평화 공동 번영을 가로막지 못하게 할 것이다. 대화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열자. 한반도 영구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 동북아 태평양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자.”

비핵화 스케줄과 단계들

- 1단계 책임있는 비핵화 프로세스 + 에너지 + 식량 지원
- 2단계 실질적 비핵화 과정 + 제제 완화와 평화 협정
- 3단계 영변 시설 폐쇄 + 유엔사의 변화 + 북일, 북미 수교+ 남북간 협력을 논의할 기구로 국가연합
- 이 과정에서 일본전문가 뿐 아니라 EU전문가를 초빙해, 우발적 상황을 관리하고 대화 프로세스를 안정화 시켜야

평화협정의 디자인

- 평화협정은 단순히 협약이 아니라 3중의 균형을 맞추는 일
- 1) 남북의 균형 2) 한반도 주변 열강(중, 미)의 균형 3) 외부와 내부의 관계들이 만드는 균형
- 남과 북의 통일 헌법 혹은 국가연합 협약
- 외부의 공동균형, 안보 보장에 대한 협약
- 한반도 공동안보에 참여하는 주변국들이 내부 갈등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협약

제제 레짐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

-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함
- 트럼프와 정상회담이후, 결국 그간 지속된 대북제제 레짐에 변화를 가져와야 함
- 제제는 수단, 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 공동번영이라는 긍정적 목표로 나아가야
- 5월 북미 정상회담이후가 가장 좋지만, 어려우면 EU와 포괄적으로 조율하여 9월 유엔 총회에서

플랜 B: 페타 꼽풀리: Fait Accompli

- 트럼프가 기대이상의 표현을 해도, 실무진이 따라붙지 않으면 공허하게 될 가능성
- 회담의 ‘말’들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현실화 시킬까?
- 정상선언 이후 국면에서 비핵화를 책임있게 관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남북간 단단하게 제도화된 통일프로세스로 돌입하여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지도

평화의 하부구조: 상호의존과 협력

- 평화의 하부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단지 도로와 기찻길, 전선을 잇는게 아니라 그것의 결과를 고려해야
- 경부고속도로가 한국의 불균형 근대화에 미친 영향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주변국을 의존시키는 경향
- 자원만 수출하고 산업화를 못할 우려
- 도시만 급속히 발전하고 농촌이 황폐화되는 경험 등

동북아 주요국의 정치 외교 일정

- 2017 한국 대선, 중국 19차 당대회, 김정은 체제 5년차
- 2018 한국 지방선거, 평창 동계올림픽, 정상회담
- 2019 3.1운동 100주년, 베르사유체제 100주년
- 2020 한국 총선, 미국 대선,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 **2022** 한국 대선(중임제 개헌시 8년), 중국 20차 당대회, 김정은 10년차
- 2023 지방선거, 한국전쟁정전 70년
- 2025 해방 80년, 2차대전 종전 80년